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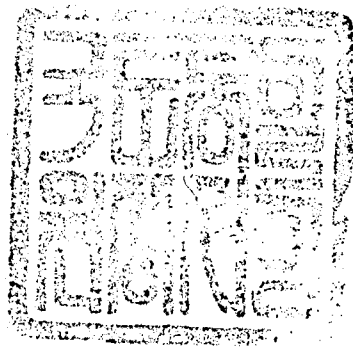
國統調 89-10-72

民族共同體 實現을 위한 段階的 政策 摸索

1989

研究責任者：郭 台 煥

(Eastern Kentucky Univ.)



國 土 統 一 院

冊을 내면서

1989年 9月 11日 盧泰愚 大統領은 우리 國民이 統一에 대한 意志와 熱望을 結集하여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을 闡明,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으로 나아가는 實踐的인 方向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報告書는 새 統一方案 마련에 즈음하여 民族共同體 實現을 위한 段階的 政策을 具體的으로 摸索하고자 委囑한 特殊課題 研究結果로 當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의 일환으로 推進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두면서 關聯 研究에 一助가 되기를 期待합니다.

1989. 10

調 查 研 究 室

< 要 約 >

李洪九 統一院長官은 “民族共同體”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통일方案을 發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李洪九 장관은 “民族共同體”가 통일로 가는 過渡期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民族共同體”개념을 정립하고, 이 개념에 따라 한국의 새통일 방안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고, 또 각 段階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追求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平和定着과 안전의 확보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民族共同體” 개념에 입각하여 韓半島統一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韓國政府의 長期的인 統一政策의 靑寫眞(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임과 동시에 段階的인 統一政策(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本연구에서 필자는 이미 필자가 1975년에 제안한 바 있는 5단계 블록 건조식 통일모델을 중심으로 韓半島 새統一政策의 靑寫眞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단계중 남북한중 현재 제2단계에 들어서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제2 및 제3단계라는 점에 注目하여 본 논문은 2, 3단계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民族共同體”실현을 위한 韓半島 統一政策의 段階的인 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統一을 지향하는 한반도 平和定着을 필자의 “블록건조식”통일방안의 개념과 5가지 단계에서 韓國政府가 취하여야 할 具體的인 政策들은 다음과 같이 要約하려 한다.

5단계 “블록건조식” 統一모델가운데 제1단계는 南北韓이 서로를 合法的인 主體로 인정하고, 다각적인 통로를 통하여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南北韓間의 相互信賴의 기반을 쌓는 시기이다. 현재 南北韓은 1971년 南北對話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 통로를 통하여 南北接觸을 維持하고 있으며, 物的 및 人的 交流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南北韓은 제1단계를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겠다.

제2단계는 南北韓이 장기적인 전략 독트린으로써 平和共存의 原則에 合議를 하고, 南北韓間의 基本條約을 締結하는 단계가 된다. 남북한은 이미 제2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2단계의 핵심적인 문제인 한반도에서의 平和共存體制의 확

립을 어떠한 수단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필자는 제2단계에서의 平和共存體制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른바 “非—제로섬방안”(non-zero sum formula)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한국으로 부터의 核武器 撤收와 駐韓美地上軍의 단계적 撤收를 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の 締結이라고 하는 양보를 얻어내자고 하는 것이다. 현재 美議會에서의 駐韓美軍撤收의 壓力이 거세지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안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결정할 수 있는 蓋然性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한국내에서도 民族主義의인 立場에서 주한미군철수문제가 一部在野와 과격파 학생들에 의하여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필자는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를 시행하기 이전에 韓國政府가 이 문제에 대하여 主導權을 갖고 創意的으로 對處하여야 한다고 主張한다. 이러한 입장은 남북한간에 이미 戰略적인 均衡(Strategic equivalence)이 이루어졌으며 駐韓美地上軍의 減縮이나 漸進的으로 撤收한다고 해도 韓半島에서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根據를 두고 있다.

또한 제2단계에서 南北韓이 취해야 할 措置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이 板門店에 고도의 통신시설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설치한다. 이것을 가칭 “韓民族共同體研究院”으로 칭하고 平和的 統一과 韓民族 葛藤·紛爭調整을 위한 共同 研究機關으로 삼는다. 둘째, 남북한이 “7·4共同聲明”정신을 尊重한다. 셋째, 韓國은 주한미군철수문제에 유연성을 보이며 北韓은 “南朝鮮 革命戰略”을 포기함으로써 각기의 基本 政策을 수정하여야 한다. 넷째, 北韓은 交叉承認方案을 수용하여야 한다.

韓國政府가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韓國政府는 북한이 1984년에 제안한 3者會談을 肯定的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對應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은 2개 형태의 4者會談(미, 소, 남북한/미, 중, 남북한)을 개최함으로써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하는 문제나 軍備縮小와 經濟協力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셋째, 韓國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데탕트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또한, 北韓으로서는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하며, 남북한 협상테이블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요구된다.

第3段階는 주변 4강(美國, 日本, 蘇聯, 中國)이 한반도에 관한 國際安保 및 經濟協力會議를 개최함으로써, 4강이 한반도의 문제에 干涉하지 않을 것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平和共存體制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4강과의 軍事的 紐帶關係를 약화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압력의 可能性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단계는 제2단계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제3단계에서 강대국들은 國際平和, 安保 및 經濟協力會議를 開催하여 4강이 한반도에 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4강이 국제협력단계인 제3단계에서 4강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미국은 韓國政府의 要請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軍作戰統制權 移讓問題를 협조하여야 하며, 북한과의 接觸과 交流를 增大시킴으로써 북한이 國際舞臺에 나오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蘇聯은 미, 소, 남북한의 4자회담에서 韓半島에서의 軍縮問題에 진지하게 임하여야 하며, 북한에게 最新銳武器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남북한간에 軍備競爭이 加速化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한국과의 다각적인 接觸과 交流를 擴大시켜 나감에 따라 한국과의 關係正常化의 길을 摸索해야 하겠다. 中國은 미, 중, 남북한이 참가하는 4자회담에서 현존하는 休戰協定을 平和條約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하며, 한국과의 접촉과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韓國과의 關係正常化를 圖謀하여야 한다. 日本은 2개 형태의 4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仲裁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日本內의 朝總聯系와 居留民團系 組織을 이용하여 南北韓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제공할 수도 있다.

第3段階에서 第4段階로 到達하게 되면 사실상 통일의 基本骨格을 갖추게 된다. 제4단계는 남북한의 核心的 이익이 재정되는 단계로써 남북한 모두가 하나의 韓民族의 利益을 設定하게 된다. 이 단계는 “韓民族共同體”形成의 시기와 일치하여, 남북한간의 體制聯合이 실현되게 된다. 이 때 공동의 정책을 형성하여 남북한 모두에게 執行할 수 있는 共同機構가 구성되게 된다.

第5段階는 南北韓統合의 最終段階로써 “南北韓 政治的 統合會議”가 開催되어 남북한 指導者들이 統一韓國의 政治體制에 관하여 合議를 보게 되는 段階이다. 이 통일국가를 “高麗(朝鮮) 聯邦共和國”으로 칭할 수 있겠다.

이러한 5段階 統一方案은 정부가 현재 構想中에 있는 “韓民族共同體” 實現을 위

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筆者는 5단계 블록건조식 통일방안을 順次的으로 추구함으로써 民族共同體實現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국정부가 상호 信賴, 互惠, 그리고 相互 讓步의 기반 위에서 韓半島統一로 향한 평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함께 노력할 때 韓半島問題는 窮極的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目 次

I . 緒論:問題提起, 研究目的과 範圍 -----	3
II . 南北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본 南北韓 關係 正常化에 관한 再照明 -----	6
III . 南北韓 統一方案의 再照明 -----	16
IV . 5단계 블록 건조식 統一方案에 입각한 “韓民族 共同體” 세 統一方案 構想의 檢討 -----	25
V . “民族 共同體”실현을 위한 南北韓 和解와 協力 (2단계:南北韓 무엇을 해야 하나?) -----	33
VI . “民族 共同體”實現을 위한 4強의 國際協力 (3단계:4強은 무엇을 해야 하나?) -----	42
VII . 結論:政策 勸告 -----	47

I. 緒 論

南北韓은 현재 한반도의 통일을 指向하는 平和定着過程 제2단계에 들어 왔다. 1988년에는 제24회 서울올림픽이 160개국에 참가하는 가운데 成功的으로 개최되었다. 北韓은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서울올림픽의 운영을 크게 損傷시킬 수도 있었을 政治的 暴力이나 테러를 自制하는 신중함을 보여주었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이 끝난 직후, 한반도에서의 緊張緩和와 持續的인 平和를 위하여 1988년 가을에 다시 南北對話가 再開되었다. 對內外的인 환경도 남북한이 협상의 테이블에 임하게 하는 觸媒劑의 구실을 하였다.

韓國의 社會主義 국가들에 대한 “北方政策”, 북한이 한국에서의 정치적 狀況을 이용하려고 하는 執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南方政策”, 盧泰愚大統領의 새로운 대북한정책, 이 모든 것이 남북한간에 새로이 浮上되고 있는 平和共存의 制度化過程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 외에도, 1989년 5월 중순 蘇聯 고르바초프의 북경방문과 非政府的인 수준에서의 韓國企業들의 북한투자 潛在力 등은 南北關係의 未來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對內外的인 潮流를 타고 이흥구 통일원장관은 “民族共同體”개념에 입각하여 統一政策을 추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民族共同體”가 통일로 가는 過渡期적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이제 “民族共同體”라고 하는 한국통일정책의 지침이 정해졌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것은 “民族共同體”의 概念을 定立하고, 이 개념에 따라 한국의 새 統一方案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進行되고, 또 각 단계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全의 確保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民族共同體”개념에 입각한 韓半島의 統一을 이룰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韓國政府의 長期的인 통일정책의 靑寫眞(統一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目標達成을 위하여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임과 동시에 短期的인 통일정책(각 단계를 成功的으로 完遂하기 위한 具體的인 政策들)을 동시에 包含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筆者는 필자가 1975년에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단계 “블록 건조식” 통일모델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韓國統一政策의 청사진으로 5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각의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具體的인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5단계 “블록 건조식”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이에 대한 具體的인 내용은 제4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제1단계는 남북한이 서로를 合法的인 主體로 인정하고, 다각적인 통로를 통하여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南北韓間의 相互 信賴의 기반을 쌓는 시기이다. 現在 남북한은 여러 통로를 통하여 接觸을 해오고 있으며, 物的 및 人的交流를 시행함으로써, 제1단계를 이미 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단계는 남북한이 長期的인 戰略的 敎訓(敎理)으로서 平和共存의 원칙에 합의를 하고, 南北韓間에 基本條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南北韓間의 基本條約에는 한반도에서의 戰爭再發을 막기 위한·남북한간의 不可侵協定을 包含하여야 한다. 남북한은 이미 제2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2단계의 核心的 문제인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체제의 확립을 어떠한 手段과 節次를 거쳐서 이루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問題解決을 위하여 필자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5절에서 다루고 있다.

제3단계는 주변4강(美國, 日本, 蘇聯, 中國)이 韓半島에 관한 國際安保 및 經濟協力會議를 개최함으로써, 4강은 한반도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동시에 韓半島에서의 平和共存體制를 國際的으로 保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4強과의 軍事的 紐帶關係를 弱화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압력의 可能性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제6절에서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제2단계와 제3단계는 상호 밀접한 聯關을 갖으며, 이 두 段階가 동시에 進行될 수도 있다.

第4段階는 南北韓 政府가 韓民族의 核心利益을 再調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한민족 共同體形成의 단계, 즉 體制聯合의 단계이며, 韓半島의 통일은 政治的 統合이 없는 상태에서 社會의 모든 水準에서 統一이 이루어 지게 된다.

第5段階는 “南北韓 政治的 統合會議”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 政治指導者들이 統一韓國의 政治體制에 대한 合意를 이루는 단계로서 韓半島統一의 完成 段階이다.

이 5단계중 남북한은 현재 제2단계에 들어서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 제2 및 3단계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제2, 3단계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民族共同體”實現을 위한 韓半島 統一政策의 段階的 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本 論文은 우선 1971년 이후의 南北對話와 접촉과정을 살펴보고, 남북한 統一方案을 比較 檢討한 다음, 5단계 블록건조식 통일방안에 立脚하여 “민족공동체”새統一方案構想을 검토하고, “민족공동체”실현을 위하여 남북한이 무엇을 하며, 또 4장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糾明한 다음, 結論에서 要約과 政策勸告를 제시함으로써 끝을 맺을까 한다.

II. 南北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본 南北韓關係 正常化에 관한 再照明

필자의 5단계 블록조식 統一方案의 제1단계인 對話와 接觸을 통한 상호 信賴構築의 기반을 쌓는 시기는 1971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南北韓間의 對話와 協商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斷切되었던 남북한간의 對話가 시작되고, 상호간의 物的·人的 교류를 통하여 다소의 信賴構築을 위한 準備가 이루어지는 段階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블록조식 5단계 중 제1단계가 이미 지나고 南北韓이 이미 제2단계에 進入해 있다고 본다. 이제 제1단계로서의 南北韓對話와 接觸의 時期를 제조명 하기로 하겠다.

1. 南北韓 對話와 接觸(1971~1989)

1971년에 처음으로 南北對話가 시작된 후 현재(1989)까지의 18년 동안 南北對話와 接觸을 5시기로 分類하여 간략하게 分析해 보겠다.

1) 南北韓 對話(1971~1973)

南北韓은 1970年代初까지 아무런 의미있는 接觸을 하지 않았다. 南北韓이 처음으로 政治的 接觸을 하게 된 것은 1970년 8월 15일 朴正熙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朴대통령은 이 演說에서 북한에게 「善意에 의한 平和的 競爭」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提案했다.¹⁾ 그 후 1971년 8월 12일 大韓赤十字社가 北韓赤十字社에 대해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위한 協商을 提議함에 따라 南北對話가 시작되었다.

南北赤十字社가 豫備會談을 進行하고 있는 동안 당시 中央情報部長 이후락과 北韓 제2부수상인 朴성철이 각각 평양과 서울을 비밀리에 訪問하여 會議를 가진 결과로²⁾ 1972년 7월 4일 歷史的인 「7·4共同聲明」이 남북한에서 동시에 發表되게 되었

다. 「7·4共同聲明」에서 양측은 3大原則 즉, 自主, 平和 및 民族大團結의 原則에 同意하였으며 南北調節委員會의 設置·運營에 同意하였다.³⁾

그 후 南北對話는 赤十字社와 南北調節委員會의 2개의 통로를 통해 進行되었으나, 북한은 1973년에 發生했던 김대중씨 납치사건과 朴대통령의 6·23宣言을 구실로 南北對話를 中斷하였다.

2) 南北韓間의 接觸과 對話(1979~1980)

이 시기는 金日成의 指導體制가 부상하고 美·中間의 關係정상화가 이루어진 때이다. 1979년부터 南北韓間에 몇차례 接觸이 보이던 중에 1979년 10·26사태와 12·12사태가 發生하였다. 그 다음해인 1980년 1월 북한은 남한의 混亂한 政국을 틈타 南北對話 再起를 위한 提案을 해왔다. 1월 12일 북한의 수상 李鍾玉과 북한 부주석이며 '祖國平和統一委員會'委員長 金一의 명의로 남한의 신현확 총리와 政治·軍事·宗教·文化의 지도자 10명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對話를 再開하자고 提案하였다.⁴⁾ 그 결과 도합 10차례에 걸쳐 2월부터 8월까지 間歇적으로 實務級 會議가 열렸다. 1980년 5월 북한은 「光州事態」에 대해 非難을 가하더니, 1980년 9월 24일 平壤放送은 8월 전두환大統領의 취임과 함께 남한과의 對話를 斷切할 것을 發表했다.

金日成은 1980년 10월 10일 勞動黨 6차 당대회의 黨中央委員會 사업총화보고에서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設立을 提案했다.⁵⁾ 金日成은 「高麗民主聯邦制」를 自主的·平和的 統一과 民族大和合의 3대원칙하에서 韓半島의 統一을 實現시킬 수 있는 가장 現實的이고 短期的인 方法이라고 주장하였다. 金日成은 또한 고려민주연방제의 形態와 構成 및 機能에 대하여, 그리고 연방정부가 遂行해야 할 10대 施政方針에 대하여 言及하였다.

北韓의 聯邦共和國案은 北韓의 統一政策의 變化를 대변한다. 이 案은 金日成이 最初에 提示한 聯邦制 구상과는 중요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初期의 구상에서 聯邦制는 統一에 대한 과도적 단계임을 암시했다. 그보다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은 북한 당국에 따르면 永久的이고 統一된 政體(polity)이다.

聯邦共和國案은 서울政府에서는 북한의 窮極의 목적인 對南赤化의 한 手段으로 파악됨으로써 容인될 수 없었다. 북한은 聯邦共和國의 실시이전 남한이 統一會談을

위한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을 수락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것은 (1) 남한에서의 파쇼지배를 종식할 것, (2) 反共政策을 廢止할 것, (3) 國家保安法을 廢止할 것, (4) 駐韓美軍을 撤收할 것, (5)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政治犯을 釋放할 것 등이다.

3) 南北韓間의 接觸(1981~1983)

聯邦共和國에 관한 金日成의 演說이 있는 후 1983년 10월의 랑군참사 사건이 發生하기까지 中斷된 南北對話를 再開하려 했던 양쪽의 시도들은 提案과 逆提案, 단속적인 시작과 중단의 연속으로 特徵지워진다.

1982년 1월 22일 全斗煥大統領을 韓半島의 平和統一에 관한 새로운 方案을 제시했다.⁶⁾ 全大統領에 의해 제안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남한의 과거 어느 때 提案보다 具體적이고 包括적인 提案이었다. 이 방안은 統一에 이르는 平和적이고 民主적인 과정을 細部的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武力과 暴力의 사용 혹은 그 威脅 그리고 共產主義的 方法에 의한 통일을 排除하고 있다.

北韓은 1982년 1월 26일 이에 대해 副主席이며 祖國平和統一委員會委員長인 金一의 성명을 통해 “이것(서울측의 방안)은 우리나라의 실제 현실을 무시한 政治的形式主義”이며 “외국군대와 그리고 現在와 같은 軍事的 파쇼체제를 그대로 둔채 ‘民族自決의 原則’과 民主的 過程’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한다는 것은 非論理的”라고 응답했다.⁷⁾

1982년 2월 1일 孫在植 國土統一院 長官은 北韓에 대하여 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한 「20個 示範實踐事業」실시를 提案했다. 평양측은 20개 사업이 이미 북한측에 의해 제안되었던 것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 하였다.⁸⁾

1983년 10월 1일 북한은 버마의 랑군에서 범죄적인 테러행위를 자행한 뒤 3개월이 지난 1984년 1월 10일 美國·北韓間의 1953년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할 것과 서울·평양간 相互不可侵宣言에 관해 討論하기 위해 南北韓·美國간의 3者會談을 제안했다. 남한은 이 제안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韓半島 問題解決을 위한 南北韓 당사자간의 會談을 促求했다. 남한측의 관점에서 볼 때 北韓의 3者會談案은 북한—미국간의 會談과 南北韓間의 會談이라는 두개의 별도의 회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 韓國이 北韓·美國間의 平和協商의 자리에 等등한 자

격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지도 불분명하였다.⁹⁾ 韓國이 3者會談을 거부한 이유는 북한측이 제시한 討議案件 가운데 駐韓美軍 撤收나 休戰協定을 美·北韓間의 平和協定으로 대체하는 문제 등이 한국측의 立場과 兩立할 수 없었다는 데에 있었던 듯하다.

韓國이 3者會談을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한국의 장기적인 國家利益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3자회담 提議에서 韓國政府를 동등한 자격으로 認定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한국이 北韓·美國과 동등한 자격으로 3자회담에 참석한다면 회담의 優先順位를 우선 南北韓 不可侵宣言을 한 뒤, 美國과 北韓과의 平和協定을 체결하도록 하는 方向으로 調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협상테이블 석상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4) 南北韓 對話와 協商(1984~1985)

1984년 8월 20일 全大統領이 南北韓間의 經濟協力과 北韓住民의 生活 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한 技術과 物資의 支援을 提案했을 때 北韓은 이에 應答하지 않았다. 그 대신 北韓赤十字社는 9월 3일 南韓의 洪水피해자들을 위해 쌀 5만석과 천 50만 미터 그리고 시멘트 10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韓赤이 이를 受諾함으로써 6·25이래 최초의 南北韓間의 物資交流가 이루어졌다.

1984년, 1985년의 기간중에 南北韓 關係改善을 위한 人道的, 經濟的, 스포츠, 國會豫備會談의 4통로를 통해 南北韓 對話가 어느 정도 成功的으로 進行되었다. 특히 南北赤十字會談에서 커다란 成果를 보았는데 1985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각각 50명의 故鄉訪問團 藝術公演團을 동시에 交換하기로 합의하였고, 양측의 100명의 故鄉訪問團 가운데 평양에서는 35명, 서울에서는 30명만이 동기간중 자신의 家族과 再會했다.¹⁰⁾ 북한은 1986년 1월 20일 南北韓 赤十字, 國會, 經濟會談을 一方的으로 斷切하였다.

5) 1986년 이후의 南北韓 接觸

1986년 이후에는 北韓은 韓半島의 緊張을 완화하기 위하여 南北韓 政治·軍事會談을 열자고 주장하였고, 그리고 同會議의 結실이 있는 후 현재 高착될 對話의 통

로(赤十字社, 經濟 및 國會會談)를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남한측은 현재 대화의 통로를(적십자, 경제, 및 국회회담) 재개하여,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난 후에 고위 政治·軍事會談을 열어 韓半島 平和定着 및 統一에 관련되는 제반문제를 討議할 것을 主張함으로써 南北韓間의 見解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6) 南北韓 關係에서의 最近의 動向

소련, 중국, 동유럽의 社會主義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北方政策”이 한국과 “北方 社會主義의 이웃 국가들”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뜻깊은 結果를 가져왔다. 더욱이, 미소간의 신 데탕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중국의 改革運動하에서 새롭게 發展되고 있는 중소간의 데탕트,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其他의 變化들이 窮極의으로는 남북한간의 平和共存의 制度化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이제 南北韓政策의 變化와 韓半島를 위요한 국내의 政治的 環境의 變化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북한의 金日成이 198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南北韓은 서로의 存在를 認定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해 9월 8日 「統一을 위해 우리는 共存의 原則을 따라야 하며 일방이 다른쪽을 전복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닌 두개의 體制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 노태우大統領은 1988년 7월 7일에 7·7特別宣言을 發表하였다. 이 特別宣言에서 노태우大統領은 다음과 같은 統一에 관한 6가지 政策을 提示하였다. (1) 각계 각층의 남북한 동포간의 相互交流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南北을 往來하도록 門戶를 開放한다. (2) 離散家族들간의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 지원한다. (3) 南北韓 交易의 門戶를 開放하고 남북한 교역을 民族 內部貿易으로 간주한다. (4) 非軍事的 物資에 대해 우리 友邦들이 북한과 交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5)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競爭, 對決外交를 終結하고 북한이 國際社會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協力한다. (6) 북한이 美國·日本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社會主義 국가들과의 關係改善을 추구한다.¹¹⁾

1988년 8월 15일 노태우대통령은 아무런 조건없이 북한 金日成 主席과의 頂上會

談을 提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하여 김일성은 美軍撤收, 북한의 聯邦提案, 南北韓間의 不可侵宣言을 포함하는 여러 문제들을 논의 하기 위하여 平壤에서 頂上會談을 열 것을 提案하였다.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頂上會談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 문제는 頂上會談의 前提條件으로 북한이 여러가지 條件을 내세우고 있는데 있다. 북한은 노-김간의 頂上會談 이전에 南北韓 高位政治軍事會談을 열것을 바라고 있다. 이제 한국은 정치-군사문제를 다루게 될 총리회담을 여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경제영역에서, 南北韓 直接交易이 수립되었다. 남북한간의 미래에 있어서의 경제 교류의 전망이 다소 樂觀的이다. 북한은 非政府的인 水準에서 한국의 企業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988년 10월 18일 제43차 유엔총회에서 노태우대통령은 남북한이 “相互信賴와 安保를 위한 安全保障의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不可侵 또는 武力不使用에 合意”할 것을 提案하였다. 그는 또한 “한국이 북한에 대해 먼저 武力을 使用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는 또 “軍備縮小 등 軍事問題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頂上會談에서의 논의가 될 안전을 제안하였다.¹²⁾

노태우대통령과 김일성주석간의 南北韓 頂上會談이 성사될 蓋然性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한국에서의 政治的 狀況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다각적인 남북한대화의 통로를 제안함으로써 平和攻勢를 개시 하였다. 여러가지 북한의 제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88년 11월 7일 한반도통일을 위한 “包括的인 平和方案”이다. 여기서 북한은 平和를 보장하기 위하여 4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1) 남한으로부터의 미군의 단계적 철수, (2) 남북한 군사력의 段階的 축소, (3), (1), (2)段階의 情報과 감시, (4) 남북한 및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이다.

韓國과 美國 역시 남북한간의 現在의 政治·軍事的 대결을 완화하기 위한 提案을 하였다.¹³⁾

서울올림픽 開催 이후에 남북한 總理會談과 國會會談을 주선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포함하는 남북한간의 對話가 進行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에 별다른 진전

이 없었는데 그것은 북한이 1989년 팀 스피리트 韓美 合同軍事訓練을 중단할 것을 고집한데 주요 原因이 있었다. 北韓은 팀 스피리트 훈련이 계속되면 南北對話가 계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팀 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될 경우 현재의 多角的인 南北韓 對話의 통로가 열릴것인가? 북한은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팀 스피리트 89를 중단하지 않았던가? 팀 스피리트 없는 南北對話의 持續과 南北韓 대화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팀 스피리트 訓練의 지속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 북한은 팀 스피리트가 지속되는 한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과의 合同軍事訓練을 선택하는 것 이외의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1989년 팀 스피리트 훈련은 단지 10일 동안만 실시되었다. 이것은 보통 2개월의 期間과 비교해서 짧은 期間이었다. 훈련의 단축은 아마도 南北韓 關係改善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韓國政府는 북한과 政治·軍事問題를 論議하는데 同意하였다. 한국이 미군의 점진적인 철수와 남북한 군비축소를 포함하는 북한의 “包括的인 平和方案”을 받아 들일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분명한 점은 韓國政府 당국이 한국내의 변화하는 대내적 정치상황과 韓半島를 둘러싼 데탕트의 國際環境을 놓고 볼 때 북한의 平和方案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7) 南北 秘密 接觸說

1989년 7월초 平祝기간에 박철언 前 대통령정책보좌관이 평양을 訪問했다는 이른바 「7월 訪北說」을 정부 當局者들은 모두 공식 否認하고 있다.

그러나 秘密接觸說은 이미 5공화국 시절부터 뉴스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바 있고 오늘에 와서는 平祝期間 訪北說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秘密接觸의 주요창구는 이른바 「88라인」이다. 88라인은 南北韓 當局間에 설치된 直通電話에 붙여진 암호명으로 알려졌다.

南北秘密接觸說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두환대통령은 1985년 4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동회의에 참석할 당시 李世基 統一院長官에게 남북간의 대화창구를 마련해 보라는 指示를 했다. 李長官은 반동에서 北韓 最高人民會議 副會長 孫成弼을 만나 이같은 제의를 했고 孫은 상부의 指示를 받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88라인은 1985년 5월 서울에서 열렸던 第8次 南北赤十字 本會談때 양측 실무자간에 合意되어 얼마후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88라인의 책임자는 張世東 당시 안기부장, 북한측에서는 許談 祖國平和統一委員會委員長이었다. 실무책임자는 한국측의 박철언(당시 安企部長 特補)과 북측의 韓時海(外務部 副部長)였다.

이 라인은 1985년 이후 현재까지도 가동되고 있으며 통상 한달에 1, 2번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이 라인의 실무책임자는 노대통령의 당시 政策補佐官인 朴哲彦 과 북측은 韓時海였다는 것이다. 양측은 88라인을 통해 그때 그때의 南北對話 등 懸案問題에 관해 서로의견을 교환해 왔고 남북 頂上會談을 성사시키기 위해 努力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6공화국을 통틀어 본격적인 秘密直接接觸의 효시가 된 것은 88라인이 설치될 무렵인 1985년 9월 초순경 허담의 서울방문과 그해 10월 중순경에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의 평양방문으로 양측은 비밀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문제를 깊숙이 論議하였고, 會談議題 문제까지 擧論되었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86년 1월들어 北韓側이 팀 스피리트 訓練中止 要求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절의 南北對話를 중단함으로써 한동안 88라인은 침묵했다. 이 라인은 본격적으로 재가동 된 것은 6공화국이 들어선 후였다. 그 후 89년 1월 하순 88라인의 실무책임자인 박철언보좌관과 한시해가 싱가포르에서 수일간 秘密接觸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이 秘密會談에서는 南北頂上會談問題, 우리측이 마련중인 새 統一方案, 南北對話進行問題, 금강산 공동개발문제 등 양측간의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주영 현대그룹 名譽會長이 1989년 1월말 북한을 방문하여 金剛山 共同開發 등에 북측과 合意를 볼 수 있었던 것도 秘密接觸의 成果로 알려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朴·韓 비밀회담에서 박철언보좌관은 한시해와 비밀접촉에서 「體制聯合」案으로 불리던 우리측의 새 統一方案을 북측에 제시,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측은 2월말(1989) 板門店에서 가진 비밀접촉에서 우리측 새 統一方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通報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5월말에도 판문점에서 한시해와 접촉, 문익환 목사의 불법입국 등과 관련

논의했고 지난 6월 6일을 전후하여 북한의 한 고위정부인사가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와 박철언 前政策補佐官과 비밀접촉을 가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박보좌관도 평양을 갔다 왔다는 6월末 訪北說이 나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일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겠다. 박철언의 6,7월 방북설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남북비밀접촉을 통하여 南北頂上會談을 포함한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끝기 위한 6공화국의 비밀외교로 結果를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¹⁴⁾

2.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過程에 놓여 있는 障礙로서의 5가지 源泉

18년간(1971~1988)에 걸친 南北對話와 協商에 관한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¹⁵⁾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統一過程의 障礙物으로써 5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남북한은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에 상반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양측은 統一을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北韓은 韓半島의 통일을 미국의 “帝國主義”와 “봉건적 抑壓과 搾取”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보는 “政治·軍事的” 접근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북한은 1953년에 체결된 休戰協定을 대체하는 미국과 북한간의 平和協定締結과 남북한 사이의 불가침선언채택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선결과제로서 남한으로부터 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은 韓半島 문제에 대해서 漸進的이고 기능적이며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韓半島의 지속적인 平和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의 또 다른 무력공격에 대한 안정되고 信憑性 있는 戰爭抑止力(deterrence)으로서 한국의 休戰協定을 그대로 두고 美軍을 駐屯시킬 것을 主張한다. 이 두가지 접근방법은 서로 양립할 수도, 받아 들여질 수도 없다.

둘째, 한국과 북한은 고착된 南北對話 재개를 위한 자기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韓國政府가 북한의 統一方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협상에 融通性없고 경직된 태도를 보여 왔다. 남북한의 政治的 對話에 별진전이 없었던 것은 긴장완화와 한반도통일에 관한 제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호신뢰와 이해 그리고 협상하려는 意志가 缺如되어 있기 때문이다. 南北韓 最高政策決定者間의

상호양보와 妥協없이 韓半島の 平和적인 통일은 물론 지속적인 平和維持도 보장할 수 없다.

세째, 북한은 내외적인 壓力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폐쇄적인 전체주의 사회를 외부세계에 개방할 의사가 없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평양은 정치적인 안정과 더불어 經濟적인 繁榮을 이룰 때까지 남한과의 平和共存을 認定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남한과의 平和공존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南朝鮮革命” 전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남북한내의 대내적인 정치·경제적 안정이 남북한 대화와 협상의 지속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네째, 북한이 항상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는 南北韓間의 核心問題는 駐韓美軍의 存在이다. 평양은 주한미군철수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오고 있다. 북한의 견해로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남북대화과 韓半島の 통일에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은 駐韓美軍이 북한에 대해 안정되고 신빙성있는 억지력을 가짐으로써 남북한간의 軍事力 均衡維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북한이 남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여 韓半島를 통일하려고 시도할 것 같지는 않다.

다섯째, 1986년 이후로 北韓은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南北韓 政治·軍事會談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南北韓 赤十字·經濟 및 國會會談을 再開할 것을 고집해 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韓國은 마찬가지로 相互信賴와 協力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현존하는 남북대화의 통로들을 재개한 후, 그 다음에 高位 政治·軍事會談을 열어서 韓半島の 平和와 통일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은 서로가 배타적이며 상반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원천(source)은 그것이 미래에 감소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한 韓半島の 통일을 지향하는 平和定着過程에 계속 障礙要素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Ⅲ. 南北韓 統一方案의 再照明

第1段階에서 南北韓이 1971년 이래로 間歇的으로 對話와 接觸을 維持함으로써 相互 信賴構築을 위한 基盤이 다소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南北韓間의 統一로 가는 노력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南北韓의 상반된 統一方案에서 찾을 수 있겠다.

1. 北韓과 南韓의 統一方案

南北韓의 統一政策은 상반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北韓의 統一政策은 '政治的-軍事的'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고 일괄 타결식의 해결을 원하고 있으나, 반면에 韓國側의 統一政策은 '漸進的이고 機能主義的'인 접근방법과 하나 하나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자는 順次的인 問題解決을 主張하고 있다. 南北韓은 각각 統一方案을 여러 차례에 걸쳐 提示한 바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包括的이며 體系的이고 최근에 發表된 것이 北韓의 '高麗 民主 聯邦制' 案과 南韓의 '民族和合·民主統一' 方案이라고 하겠다. 이제 南北韓의 統一政策을 각각 檢討해 보도록 하자.

그럼 먼저 北韓의 '高麗 民主 聯邦 共和國' 方案을 보도록 하자. 1980년 10월 10일 김일성은 朝鮮勞動黨 제6차 全黨大會에서의 中央委員會 사업총화보고에서 '高麗 民主 聯邦 共和國' 創設方案을 提示하였다.¹⁶⁾ 김일성은 高麗 民主 聯邦制를 '自主的·平和的 統一과 民族 大和合'의 3대 원칙하에서 韓半島의 統一을 實現시킬 수 있는 가장 現實的이고 短期的인 方法이라고 主張하였다. 김일성은 또한 高麗民主聯邦制의 形態와 構成 및 機能에 대하여, 그리고 聯邦政府가 수행해야 할 10大 施政方針에 대하여 言及하였다. 김일성의 高麗民主聯邦制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要約될 수 있는데, 이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丑 1] 北韓의 統一方案

高麗民主聯邦會議(1980.10.10)

最高民族聯邦會議(SNCA)
(南北韓 동일한 수의 代表,
적절한 수의 海外 居住者 代表)

聯邦常設委員會(CSC)
(수는 알려지지 않음. 最高 民族聯邦
會議 休會時 聯邦常設委員會 開催)

民族聯合軍
(Combined National Army)
(國家安保:
南·北韓 軍事力의 統合)

機能:

1. 南北韓 地域政府의 指導 監督
2. 政治·國防·外交問題와 기타 공
동의 關心事를 決定
3. 國家全體의 均等한 發展 圖謀
4. 南北韓間의 統一과 和合을 圖謀

南北韓 地域政府

機能:

韓 國

1. 國家全體의 요구와 이익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獨立的인 政策 추구
2. 國家全體의 均衡된 發展 도모
명칭:高麗 民主 聯邦 共和國
성격:中立的 非同盟 國家

北 韓

1) 聯邦共和國의 統一政府 組織

最高民族聯邦會議은 같은 수의 남북한 代表와 적당한 수의 海外 同胞 代表로 구성한다. 聯邦常設委員會는 最高民族聯邦會議에서 구성되어 南北韓의 地域政府를 지도하고 聯邦政府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最高民族聯邦會議과 聯邦常設委員會(最高民族聯邦會議의 常任機構)는 연방국가의 統一政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일성은 1983년 9월 9일 북한 창설 35주년을 기념하는 연회 석상에서 행한 연설에서 最高民族聯邦會議과 聯邦常設委員會의 運營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김일성은 “聯邦國의 統一政府로서 最高民族聯邦會議과 聯邦常設委員會는 남북한으로부터 각각 공동의장을 선출하여 輪番制로 統一政府를 運營하게 된다”고 하였다.

2) 聯邦共和國의 統一政府가 갖는 機能

聯邦政府는 남북한 고유의 社會體制, 行政組織, 政黨, 社會團體, 국민의 權限 등을 존중하며, 남북한 중 어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자기의사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입각한 연방 정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남북한의 地域政府를 지도한다. (2) 諸般 政治的 事態, 民族 防衛 問題, 對外關係 및 기타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討議·決定한다. (3) 地方의 均等한 發展을 지향하여 全民族이 發展할 수 있도록 한다. (4) 모든 領域에서 남북간의 一致와 協調를 도모한다.

3) 地域政府의 機能

聯邦政府의 指導·監督하에 自主的인 남북한의 地域政府는 全民族의 基本적 이해와 요구에 副應하는 범위내에서 獨立的인 政策을 遂行한다. 남북한의 地域政府는 모든 領域에서 남북한의 차이를 감소시키고 地域과 民族의 均等한 發展을 도모한다.

4) 統一國家의 名稱

韓半島가 과거 統一國家였던 시기의 이름을 따서 統一된 聯邦 國家는 ‘高麗 民主 聯邦 共和國’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5)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性格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은 어떤 政治的·軍事의 同盟이나 블럭에 加담하지 않는 非同盟·中立國이 되어야 한다.

6)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10大 施政方針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10大 施政方針에는 自主政策, 民主的社會·政治體制의 발전, 남북한간의 經濟協力 및 交流를 통한 民族經濟의 自主的 育性, 남북한 交流 및 協力, 交通 및 遞信 施設, 복지 도모, 民族 聯合軍 創設, 해외 동포의 權益保障, 統一된 對外政策 實施, 平和的 外交 政策 등이 포함된다.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은 外國軍의 韓半島 駐屯 및 外國 軍事 기지의 國內 배치를 금하며, 核武器의 製造, 搬入 및 使用을 禁止함으로써 韓半島를 영구 平和地域, 非核地域으로 保存시킨다.

高麗 聯邦制는 統一을 향한 과정이었던 과거의 聯邦制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金日성이 高麗民主聯邦制의 聯邦(confederation)을 韓半島 統一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 最終的인 完成 形態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궁극적이라기 보다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國際政治의 動態的 側面에서 볼 때 상반된 政治·經濟·社會 體制가 高麗民主聯邦共和國과 같은 單一한 聯邦體制를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의문은 통일된 聯邦政府內에서의 權力配分問題 및 聯邦政府와 地域政府間的 권력배분 등은 어떻게 解決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韓國政府는 高麗民主聯邦制가 한국을 赤化하고자 하는 북한의 궁극적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方案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北韓 聯邦制 실시 이전에 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統一의 前提條件을 提示하면서 이의 受諾을 요구하였다. 즉 1) 現 韓國政府의 退陣, 2) 反共政策의 廢棄, 3) 國家 保安法의 廢棄, 4) 駐韓美軍의 撤收, 5) 共產主義者를 포함한 政治犯의 釋放 등이 그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前提條件은 한국정부로서는 수락할 수 없는 것들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82년 1월 22일 전두환대통령은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신

과 김일성의 頂上會談을 제안하였다.¹⁷⁾ [表 2]는 全대통령의 統一方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民族統一協議會議

全대통령은 남북한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표 할 수 있는 대표자들로 民族統一協議會議를 構成하자고 제안하였다. 民族統一協議會議는 民族和合, 民主主義, 自由, 個人 福祉 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통일된 民主共和國를 韓半島에 건설하기 위하여 憲法을 기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와 같은 憲法이 기초되면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國民投票를 통하여 南北韓間의 合法化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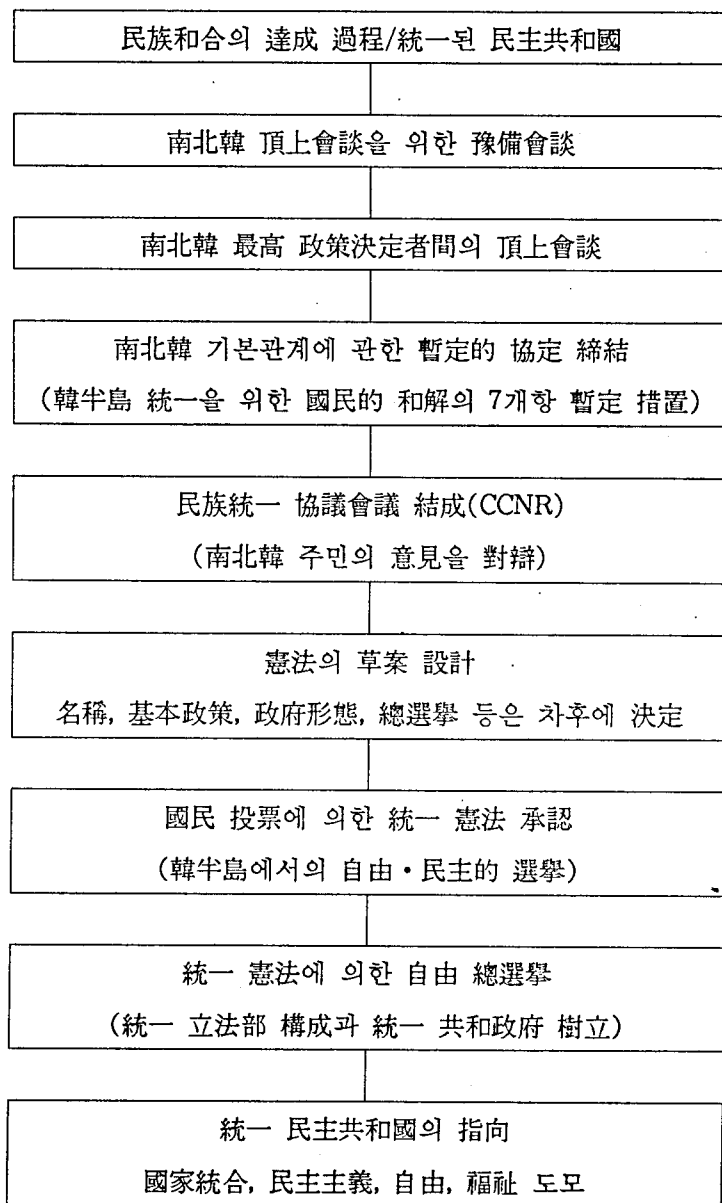
2) 憲法の 基礎

憲法을 基礎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政治的 이데올로기, 統一國家의 名稱, 기본적인 국내 정책, 정부의 형태, 統一法案을 위한 總選의 方法 및 時期 등을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討議・決定한다.

3) 暫定的 方法

民族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努力이 진행 중인 전(前)단계 기간 동안 暫定的으로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締結한다. 그리고 이 暫定協定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다. 즉 互惠平等의 原則, 武力이나 暴力의 使用禁止 및 對話와 協商을 통한 平和的 解決, 상대방 체제의 認定 및 內政不干涉, 기존 休戰協定 維持 및 軍비경쟁과 軍사대결의 終息, 相互交流과 協力を 통한 社會的 開放, 상대방의 雙務的・多者間 條約 및 協定の 존중, 그리고 常駐 連絡代表部를 각기 서울과 평양에 설치할 것 등이다.

[表 2] 韓國의 統一方案



* 출처:1982년 1월 22일 전대통령의 政策發言에 근거를 둠.

4) 南北韓 頂上會談을 위한 豫備會談

閣僚級 代表중심의 南北韓 高位代表團은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회담을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으로써 豫備會談을 開催한다.

韓國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은 과거 한국에서 제안했던 다른 統一方案들에 비해 좀 더 具體的이고 包括的인 것이었다. 그 기본 구상에 따르면, 統一이란 '특별히 어떤 특수 계급이나 집단에 의해 恣意的으로 추구될 수 없는 것'이며 특별한 이데올로기나 이념 및 제도를 위한 것이 될 수 없고 '은 국민의 統一에 대한 熱望·民族和合을 바탕으로 축적된 熱望'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제안에서는 暫定協定の 締結을 民主和合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統一에 沮害되는 요인이 除去되고 效率的으로 統一憲法을 기초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구축하여, 總選을 통하여 統一로 나아가게 된다. 이 統一方案에는 남북한이 모두 각각 憲法草案을 작성하여 民族統一協議會議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측의 헌법이 연구되어 하나의 統一憲法草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¹⁸⁾ 북한이 의사만 있다면 북한의 高麗聯邦制案을 民族統一協議會議에 제출하여 더 많은 研究와 協議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韓國과 北韓이 각기 제안한 統一方案을 이해하기 위하여 양측의 제안을 要約하여 비교하면 [表 3] 과 같이 나타난다.

남북한의 統一方案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統一된 한반도의 組織과 政體에 대해 意見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은 民族主義, 民主主義, 自由, 個人의 福祉 등을 이상으로 추구하는 統一民主共和國를 지향하는 반면에, 북한은 統一된 高麗民主聯邦共和國內에 남북한의 自主的인 地域政府가 존재할 것을 도모한다. 또 북한은 남북한간의 統一方案에 대해 相互 會談하기 위한 前提條件으로서 한국 현정부의 해체와 북한에서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정부의 등장,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의 廢止, 駐韓美軍의 撤收 등을 주장해 왔다.

둘째, 統一方案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韓國의 統一方案은 통일에 도달하는 民主的 節次를 重視하고 있다. 民族統一協議會에 의한 통일된 한반도 憲法의 基礎, 國民投票에 의해 확정된 헌법 하에서의 總選實施, 總選을 통한 統一된 議會와 政府를

수립하는 것이 그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統一方案 남북한의 政治會談에 한국의 특
정인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한국에 一方的인 條件을 強要하려고 한다.

세째, 韓半島 統一에 대한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통일에 이르는 暫定的
過程으로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締結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의 正常化
를 도모하려고 한다. 반면에 北韓의 統一方案은 高麗民主聯邦制下的 남북한 협력을
전제로 하면서, 聯邦共和國이 수립되기전에는 남북한간의 협력은 있을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네째, 民族統一協議會議과 북한에서 제안한 100人 共同會議에는 차이가 있다. 民
族統一協議會議는 각기 출신지역의 견해를 대표하는 남북한 양측의 대표로 구성된
다. 따라서 南北韓은 각기 그 정치질서하에서 代表를 選出하고 상대방의 代表選出
에는 干涉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에 北韓은 韓國의 現政府 當局과 몇몇 한국 지도
자 및 海外同胞 대표들은 공동회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같이 南北韓의 統一政策은 서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
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과 궁극적으로는 民
族的 統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對話와 接觸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할 것이다.

[表 3] 남북한 통일 방안의 비교

韓 國	北 韓
<p><民族和合·民主 統一方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統一協議會議(CCNr) • 民族統一協議會議 憲法草案 • 國民投票 • 자유로운 總選舉 • 統一 政府와 立法府 設立 • 自決原則, 民主的·平和的 過程 	<p><高麗民主聯邦共和國 方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高民族聯邦會議 • 聯邦常設委員會 • 聯邦國家의 統一 政府 • 南北韓의 地域政府 • 政治·國防·外交 그밖의 問題
<p><中間의 案></p> <p>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 締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相互 互惠, 平等 原則 2. 暴力과 軍事力 사용의 포기, 對話와 協商에 의한 모든 문제의 平和的 解決 3. 政治體制와 社會制度의 相異性 인식, 內政 不干涉 4. 休戰協定 유지와 군비 5. 貿易·交通·郵便·遞信·스포츠·教育·文化交流와 協力을 통한 社會의 相互開放(예:이산가족 재결합을 포함한 자유로운 여행) 6. 雙務的·多邊的 協定과 條約의 존중 7. 서울과 평양에 상주하는 連絡代表部 設치 	<p><前提 條件></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駐韓美軍 撤收와 韓美相互防衛 條約 廢棄 2. 韓國의 民主化 3. 反共主義 政策 拋棄, 反共法 廢棄, 統革黨 인정 4. 2개의 코리아 政策 拋棄 5. 光州 事件에 대한 사과와 정치범 석방
<p><과 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韓 最高政策決定者間의 頂上 會談 • 閣僚 代表團의 豫備會談 • 20개항 示範 事業 	<p><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10대 施政 政策></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自主 政策 2. 民主主義-國家 統일을 진작 3. 經濟的 協力과 交流 및 私有 財產 保護 4. 科學·文化·教育 분야의 協力과 交流 5. 交通·遞信 업무의 開放 6. 生活 安定과 福祉 圖謀 7. 民族聯合軍 組織과 남북한 병력을 10만~15만명으로 減縮 8. 해외 동포의 權益 保護 9. 남북한 지역 政府의 外交政策 統合, 모든 條約·協定 廢棄 10. 平和的 非同盟 外交 政策

IV. 5段階 블록 건조식 統一方案에 입각한 “韓民族共同體” 새 統一方案構想의 檢討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南北韓은 서로 相反된 統一方案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에서의 統一이 별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韓國 第6共和國은 轉向的인 시각에서 “民族共同體”概念에 입각한 새로운 統一方案을 摸索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民族共同體”實現을 위한 段階的인 統一方案으로서 5段階 블록 건조식 統一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5段階 “블록 건조식” 韓半島 統一方案

韓國問題의 性格을 理解하기 위하여는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政治的 統合을 區分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러나 一部 學者들은 이 두가지 用語를 混用하고 있다. 韓半島의 (政治的)統一은 非政治的인 分野에서의 기능적인 統合이 아닌 南北韓 指導者들의 “政治的 意志의 行爲”를 통하여 韓半島에서의 두개의 政府를 結合시키는 것을意味한다.¹⁹⁾ 南北韓 關係의 行動類型이라는 側面에서 韓半島 統一이란 證하는 協力, 南北韓 紛爭의 意識的인 縮小 등을 包含하는 相互 受用possible한 行動을 包含하는 것으로 特徵지워지는 相互間의 依存, 連帶性, 그리고 民族 單一感의 強力한 紐帶關係를 意味하게 된다. 그것은 또한 統一韓國의 社會·經濟·政治體制의 靑寫眞에 관한 相互間의 合意를 意味하기도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韓半島 統一은 達成 possible한 長期的인 目標가 된다.

한편, 韓半島의 政治的 統合이란 韓民族의 存續, 安全, 福祉에 寄與하는 共同의 拘束力을 갖는 決定을 내리는 南北韓 指導者들의 意識的인 政治的 決定을 통하여 南北韓 政府를 同一한 行政, 經濟, 政治的 體制를 갖는 하나의 政府로 變形시킴으로써 自發的이며 平和的으로 새로운 政治體制를 樹立하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韓半島 統一이 韓半島 統合以前에 오게 될 수 있다. 韓半島의 統一은 南北韓에 韓半

島統一에 대한 共通된 靑寫眞에 合意하게 된 때 우선 엘리트 水準에서 發生하게 되며 정치적 統合이 此後에 統一 中央政府를 갖는 두 개의 社會의 모든 水準에서 發生하게 된다.

앞에서 定義한 韓半島 政治統一과 政治統合의 過程에서, 韓半島 統一의 問題는 相互 受容할 수 없는 目的, 價値, 이데올로기, 體制에 관한 南北韓 政治的 紛爭을 管理, 調整, 解消하여 窮極의으로는 終熄시킴으로써, 成就될 수 있는 南北韓 協力維持와 紛爭解消의 過程으로 볼 수 있다.

1) 政治的 過程으로서의, 韓半島 政治的 統合

韓民族의 長期的인 目標로서의 韓半島 政治的 統合은 韓國問題가 4強—美國, 日本, 中國, 蘇聯—의 複雜한 關係가 뒤엎힌 利害關係에 의하여 크게 影響을 받고 있기 때문에 南北韓 政治的 過程과 國際的 政治的 過程을 통하여 達成될 수 있다. 따라서, 韓半島의 政治的 統合은 南北韓 紛爭解消와 4강의 國際的 데탕트의 機能이며, 國際 데탕트 속에서의 國際協력과 和解가 韓國의 指導者들이 自身의 問題를 平和的인 方法으로 스스로 解決할 수 있는 機會를 增加시킨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韓半島의 統一은 南北韓의 協力的 行動을 形成하는 全世界的인 國際體制와 동북아시아의 國際下位體制, 그리고 國內的 變數들의 構造와 過程에 依存하게 된다.

韓半島 統一을 紛爭管理와 解消로 봄으로서, 필자는 1975년 當時의 南北韓 統一 方案에 대한 對案으로서 韓半島 政治的 統合의 5段階 “블록 건조식”모형을 提案하였다.²⁰⁾ 變化하고 있는 國內外的 環境에 비추어 “블록 건조식”모형을 再評價하고 修正 補完할 것이 要求된다고 하겠다. 이 모형은 政治的 統合理論—聯邦主義, 機能主義, 新機能主義, 相互作用理論—과 紛爭管理方案에 입각해 있다.

南北韓의 統一政策을 檢討해 보면 서울과 平壤이 제한한 統一接近方案 및 戰略들이 서로 受容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分明해진다. 南北韓은 서로 受容 可能한 統一 方案에 合意할 必要가 있다. 다음에 提案되고 있는 것과 같은 韓半島 統合모형에 관한 相互間的 合意가 없이는 韓半島 政治的 統合으로의 進展이 있을 수 없다. “政治的인 意志의 行爲”로서, 南北韓 指導者들은 北韓 高麗民主聯邦制案과 韓國의 民

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입각하여 韓半島 統一모델을 開發할 수 있다. 南北韓 統一方案에 대한 對案으로서 “블록 건조식”모델을 提示하였다.

2) 韓半島 政治的 統合의 5가지 段階

“블록 건조식”모델은 韓半島의 政治的 統合이라고 하는 窮極的인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漸進的인 決定을 이용하는 合理的인 意思決定過程을 수반하고 있다. 相互信賴와 利害를 위하여 블록을 까는 것이 相馳되는 價値, 이데올로기, 社會·經濟·政治的 體制를 갖는 南北韓間의 窮極的인 合意로 이루는 첫번째 段階이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을 하나 하나씩 쌓아 가야 하듯이, 韓半島 統合의 基盤은 南北韓間의 相互信賴와 友好的인 相互交流關係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兩側에 의한 相互協力과 讓步가 統一國家를 達成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處方的인 모델은 5가지 段階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過程을 통해 “블록 건조”의 確固한 基盤 위에서 統一祖國이 成就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 단계:

南北韓은 상대방을 合法的인 協商 對象으로 인정하고 赤十字社, 南北韓 經濟會談 등의 多角的인 通路를 통하여 對話를 지속하려고 하여야 한다. 南北對話가 繼續되지 않으면 이 모델에서 다른 措置를 취하는 것이 不可能하게 된다. 南北韓은 자신들의 要求, 野望, 目的에 보다 엄격한 限界를 設定해야 하며, 兩側 모두가 南北韓 테맷트에 대하여 柔軟性 있으며, 現實的이고, 積極的인 行動을 취하여야 한다. 事件-데이터 分析(Events-Data Analysis)의 觀點에서 筆者는 南北韓間의 相互作用 패턴이 協力的 行動의 강도와 빈도에 의하여 特徵지워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相互誹謗을 中止하고, 相互信賴를 增進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友好的인 信號를 增加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南北關係의 이 段階에서 南北韓間의 關係正常化를 위한 基本條約을 마련하기 위한 政治的 會談을 열어야 한다. 이러한 關係正常化 條約은 當事者들이 合法的인 當事者로서 서로 協商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基本條約에 관한 論議와 함께 南北韓 關係가 이 모델의 제2段階로 進入할 수 있다.

第 2 段階:

이 段階는 南北韓이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과 安定 그리고 나아가서는 韓半島 統一基盤의 造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問題와 直結된다. 第2段階에서는 第1段階에서의 南北韓 接觸과 對話를 통하여 이루어진 南北韓間의 友好的인 關係의 基盤위에서 長期的인 戰略的 敎理로서 平和共存의 原則에 따라 南北韓間의 基本條約을 締結하는 段階이다. 相互 平和共存에 대한 受諾이 南北韓間의 戰爭拋棄에 관한 暫定協定을 위한 前提條件이다. 南北正常會談이 韓半島에서의 政治的 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寄與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이 모델의 第2段階를 지나서 南北韓 關係에 相當한 發展을 볼 수 있는 可能性을 增加시킬 것이다. 北韓政府가 끈질기게 主張해 온 駐韓美軍의 撤收²¹⁾를 條件으로 北韓과의 基本關係에 關한 協定을 締結함으로써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을 위한 平和共存體制를 樹立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具體的인 內容은 第5節 參照).

第 3 段階:

第3段階에서는 第2段階에서 발전시킨 南北韓間의 平和共存體制를 주변4強에 대하여 주변4強이 保障을 받아내는 단계이다. 南北韓은 지금까지의 強大國 同盟國에 대한 “癒着”을 약화시키고, 強大國에 대한 軍事的 依存度を 줄여야 한다. 이 段階에서 韓半島에 관한 國際平和安保 및 經濟協力會議을 개최하여, 4強이 韓半島 問題에 관한 基本的인 理解에 到達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게 된다. 이 3段階에서는 아직도 強大國들이 “南北韓間의 政治協商”에 간섭할 소지가 충분히 남아 있을 것이다. 南北韓 指導者들에 대한 外部로부터의 壓力을 極小化시키는 것이 此後의 段階를 위한 重要的인 디딤돌이 될 것이다. 南北韓은 각각 4強과 同盟을 맺지 않을 것이며 兩側은 모두 統一韓國을 達成하기 위하여 그 以上の 措置들을 스스로 취해야 할 것이다.

第 4 段階:

第4段階는 南北韓의 核心的 利益을 再調整하는 것을 隨件한다.²²⁾ 第1段階에서 第3段階까지, 韓國의 核心利益은 領土保全과 政治的 獨立의 保存이어야 한다. 北韓 政

治體制的 保存이 北韓의 核心利益이 될 것이다. 第4段階는 南北韓 政府가 韓民族의 核心利益을 再調整하는 段階이다. 換言하면, “韓民族共同體”의 形成이 이루어지는 段階이다. 한개의 政府下에서 韓半島의 統一을 再定義하게 된다. 이것이 南北韓 모두의 核心的 利益이 되어야 한다. 韓半島의 統一과 統一韓國의 安保가 南北韓 각각의 이데올로기와 政治體制的 維持라고 하는 利益에 우선하여야 하는 것이다. 第4段階에서 南北韓 指導者들은 政治的 흥정과 協商을 위하여 心理的 準備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들이 확고히 보유하고 있는 權限을 體制聯合으로 移讓할 意思가 있어야 한다.

第4段階는 政治統合 以前の 段階이며, 統合이 엘리트 水準에서만 發生하게 된다. 韓半島의 統一은 兩側 社會의 모든 水準에서의 政治的 統合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段階에서 南北韓이 體制聯合(confederation)을 公式적으로 宣言하게 되는 것이다. 이 段階에서 南北韓 모두에 拘束力을 갖는 共同的 政策을 決定하고 또 強制執行 할 수 있는 共同的 政策決定 機構가 樹立되어야 한다. 體制聯合의 時期는 1990年代 末로 아마도 1998年으로 잡아서 그 해까지 韓半島 統一의 共通된 目標을 활기차게 追求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第 5 段階:

第5段階는 南北韓 政治指導者들간의 “政治的 協商과 흥정”을 隨伴하는 「南北韓 政治的 統合會議」의 段階이다. 南北韓 政治 指導者들은 統一韓國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政治體制가 가장 적합하며, 또한 南北韓 社會의 모든 水準에서 韓半島 統合을 이행하기 위한 總選舉의 實施 問題를 포함하는 其他의 다른 爭点들을 協商하고 흥정하게 된다. 韓半島 全域에서의 總選舉는 南北韓 指導者들도 그 構成員이 되는 國際委員會에 의하여 監督될 수 있을 것이다. 統一國家는 가칭 高麗(朝鮮) 聯邦共和國으로서 稱할 수도 있을 것이다([표 4]參照).

2. 第6共和國의 새로운 統一方案의 構想과 5段階 불록 건조식 統一모델

韓國의 새로운 統一方案 構想의 “民族共同體”란 위에서 다룬 5段階 가운데 제4段階에 該當한다. 즉, 民族共同體란 南北韓間의 體制聯合의 段階로서, 두 개의 政府가 하나로 結合하는 政治的 統一의 段階라고 할 수 있다.

政府의 새로운 統一方案構想은 이홍구 統一院長官이 밝힌 이른 바 “體制聯合” 方案인데 이것은 南北韓이 1民族, 2體制인 점을 인식하고 “1民族, 1國家”가 되는 統一國家를 이룰 때까지 相互間에 서로 다른 體制를 認定하는 過渡的 統一方案이라고 할 수 있다. 南北韓이 서로 다른 體制를 認定하면서 民族共同體를 形成하고 相互信賴를 回復한 다음 궁극적으로 統一國家를 形成한다는 것이다.

政府의 새 統一方案은 “民族和合·民主統一” 方案을 修正·補完한 것으로서 民族共同體의 概念을 도입하여, 앞으로 兩體制의 “對立狀態”를 지양하고 相互間에 “協力”을 통하여 統一國家를 이루어 보자고 하는 轉向的인 方案이라고 생각된다.

[표 4] 韓半島 政治的 統合의 “블록 구조식” 모델

第 5 段階	統一 國家： 朝鮮(高麗) 聯邦共和國
第 4 段階	體制聯合(1998年) (韓民族共同體)
第 3 段階	韓半島에 관한 國際協力會議 (韓半島의 非同盟 宣言)
第 2 段階	基本關係條約 (盧一金 頂上會談) (政治·軍事的 對話) ----- 平和共存의 制度化
第 1 段階	南北韓間의 非政治的 對話의 繼續 韓 國 北 韓
	分斷 韓國

이 論文을 쓰고 있는 現在까지(8月初) 政府의 새 統一方案이 發表되지 아니 했으며 1989年 7月 13日 中央日報에 報道된 內容으로 새 統一方案(民族共同體)을 보면 3段階로 構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統一過渡機構로 “南北 閣僚會議” 및 “民族統一協議會議”를 구성하고, 둘째,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統一憲法을 제정하고 國民投票로 확정된 다음, 셋째, 이 憲法에 따라 總選을 통해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갖는 單一 民族國家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政府形態는 單一 民族國家로 하고 統一國家의 國會構成은 地域代表(南北同數)와 住民代表(人口 比例)에 의한 兩院制로 하도록 하고 있다.

새 統一方案은 統一過程 추진과 함께 “南北 閣僚會議”를 설치 南北韓 交流·協力과 平和定着 등 南北韓 懸案 등을 협의·체결하고 共同利益을 圖謀하도록 하고 南北閣僚會議와 民族統一協議會議의 協議가 交錯狀態에 빠질 경우 “南北頂上會談”을 개최하여 이를 지도·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統一方案의 개념정립에 있어서 기존의 領土的·制度的 概念에 기초한 統一原則에 “民族共同體”의 統一概念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自主·平和·民主·福祉를 統一4原則으로 삼고 있다. 民族共同體는 單一 民族 國家를 지향하기 위한 概念으로서 生存 共同體(社會·經濟 共同體), 福祉 共同體, 理念共同體의 성격을 띠게 된다.

分斷 40年間 누적된 남북한간의 不信과 葛藤을 고려할 때 統一國家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中間段階의 設定이 필요하다. 이 統一을 향하여 가는 中間段階에서는 南韓과 北韓이 相互主義의 原則에 따라 상대방의 政治體制와 社會制度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相互 協力과 共存公榮關係를 도모하면서 統一基盤을 조성하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機能主義 原則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第6共和國의 새로운 統一 方案構想의 “民族共同體”를 實現하기 위하여는 이미 南北韓이 進入하고 있는 블록 건조식 모델가운데 第2段階와 第3段階를 성공적으로 推進하는 段階的이며 長期的인 政策方案이 要求된다.

이제 第2段階와 第3段階에서 南北韓과 4強이 취하여야 할 政策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V. 民族共同體 實現을 위한 南北韓 和解와 協力

(2段階: 南北韓 무엇을 해야 하나?)

南北韓間의 民族共同體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第1段階에서의 南北韓 對話와 接觸을 더욱 발전시켜서 南北韓間의 和解와 協力を 制度化하는 것이 필요로 되며, 第2段階에서는 南北韓間의 平和共存의 制度化를 구축하기 위하여 南北韓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問題가 다루어져야 한다.

韓半島의 문제 해결은 “7.4 共同聲明”의 3大原則, 즉 韓民族 스스로가 自主的이며 平和的으로 民族 大團結의 原則에 입각하여, 韓民族이 主導權을 일차적으로 政治的意志와 相互讓步를 통하여 平和定着過程을 위한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諸方案을 추진해 나갈 때, 民族分斷이 가장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段階에서는 南北韓間의 우호적인 관계의 基礎에서 長期的인 戰略的 教理로서 平和共存의 原則위에서 南北韓間의 基本條約締結이 이루어져야 한다. 南北韓은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戰爭이 아무런 有益한 目的에 닿지도 않으며, 韓半島 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必要하지도 또 不可避하지도 않다는 점을 認定하여야 한다. 南北韓間의 紛爭解決을 위한 手段으로서 武力使用에 대한 拋棄를 南北韓 兩側이 公히 合意하여야 한다. 이 段階에서의 南北韓 基本條約은 韓半島에서의 戰爭氣概를 방지하기 위한 南北韓間의 不可侵協定을 포함하여야 한다. 平和共存原則을 南北韓이 수용하는 것이 南北韓間의 戰爭拋棄에 관한 暫定協定締結을 위한 前提條件이다. 南北頂上會談이 韓半島에서의 政治的 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기여할 것이다.

北韓의 과거의 政策聲明과 行動을 통하여 볼 때, 서울 政府가 美軍撤收問題에 대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美軍이 韓國으로부터 段階的으로 撤收하게 될 경우 平壤側은 第2段階를 受諾하게 될 것이다. 또한 平壤側이 駐韓美軍 撤收를 고집해 왔기 때문에 駐韓美軍 撤收가 金日成으로 하여금 盧一金 頂上會談에 나오도록 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北韓이 基本關係條約을 受諾한다고 할 경우, 南北韓은 頂上會談에서 駐韓美軍 撤收問題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4強이 第3段階에서 南北韓 不可侵協定을 保障한다고 할 경우, 韓國으로부터의 美軍의 撤收가 이루어진 다음, 南北韓間의 不可侵協定을 포함하는 南北韓의 基本條約 締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을 위하여 南北韓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遂行하여야 하는 政策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平和定着을 위한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諸方案

1) 南北韓 兩側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南北韓 모두는 南北對話와 協商을 유리한 政治的 霧圍氣를 조성하기 위하여 몇가지 생산적인 信賴構築方案을 취하여야 겠다.

첫째, 南北韓이 板門店에 고도로 발전된 通信裝備設備를 갖춘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을 가칭 “韓民族共同體研究院”으로 명하고 平和的 統一과 紛爭調停의 상징으로 삼는다. 이 研究院에서 南北韓 兩側의 대표자들과 학자들이 常任研究員으로서 南北韓 問題를 研究하고 南北韓 紛爭調停을 위해 일하게 되며, 여기서는 南北韓의 共同院長(Co-Director)制度를 채택한다.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南北韓間의 커뮤니케이션이 相互信賴構築을 높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共同利益에 대한 誤解의 所持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研究院의 必要性이 부각된다고 하겠다.

둘째, 南北韓은 과거 서로 합의한 바 있는 「7·4共同聲明」의 정신과 내용을 尊重하고 遵守해야 한다. 서울과 平壤도 宣傳이나 內部的 政治的 目的을 위하여 南北韓對話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兩側은 모두가 상대방에 대한 敵對的인 信號를 줄이며 협력적인 相互作用의 強度와 頻度數를 증대시킴으로써 南北韓間의 德 땅에 기여해야 하겠다.

셋째, 서울과 平壤은 모두 韓半島 問題에 관한 각자 現在의 政策과 基本立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韓國政府는 駐韓美軍撤收問題에 관해 柔軟性을 보여야 하며, 北韓은 「南朝鮮 革命戰略」을 포기해야 한다. 平壤은 지난 40년동안 추구해 왔

던 南朝鮮革命이 무력으로 성취될 수 없으며, 韓國의 딜레마는 南北韓 양자간의 會談과 協商을 통한 政治的이며 平和의 手段에 의해서만 解決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北韓이 長期的인 戰略的 獨트린 (doctrine)으로서 南韓과의 平和共存政策을 수락함으로써 韓國政府의 存在를 인정해야 할 때인 것이다.

네째, 北韓은 交叉承認(Cross-Recognition)方案이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相互信賴增進의 効果적인 政策手段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北韓은 交叉承認이 南北韓 分斷을 영구화한다는 理由로 반대해 왔지만, 交叉承認이 동북아시아에서의 平和的인 環境造成과 궁극적으로는 韓半島의 統一過程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認識하여야 하겠다.

한편, 韓國政府가 7·7宣言 이후, 日本과 美國이 北韓과의 公式的 接觸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서울이나 平壤은 모두가 南北韓과 관련 4強간의 關係改善을 위한 公式的 交叉接觸과 交流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現在의 趨勢는 南北韓과 주변 4강이 이러한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交叉承認案을 수락할 경우, 北韓이 제안한 3자회담이 美國과 韓國에게 受容可能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韓國政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韓國이 單獨으로 취할 수 있는 信賴構築方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다.

첫째, 1984年1月10日 北韓은 平壤, 서울, 워싱턴간의 3자회담을 提案하였다. 北韓은 3자회담을 통하여 休戰協定을 代替할 平和條約 및 南北韓間의 不可侵宣言問題에 關係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韓國側은 이 제안에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韓半島問題 解決을 위한 南北韓 當事者會談을 지지하였다. 南韓의 시각으로는, 北韓이 제의한 3자회담이 3자회담의 테두리내에 2개의 별도의 會談-北韓과 美國間의 會談 및 南北韓 會談-을 포함하고 있다. 韓國이 동등한 자격으로서 北韓-美國間의 平和協商에 參加하도록 許諾될 것인가는 분명하지가 않다. 따라서 서울은 北韓의 이 제안에 반대하였고, 워싱턴도 역시 반대하게 되었다.

여기서 美國과 南韓이 1979年7月 北韓에게 南北韓 및 美國을 포함하는 3當局會

談을 제안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南韓은 왜 北韓의 3者會談 제안을 거절했는가? 아마도 그 주요한 理由는 韓國政府가 駐韓美軍撤收와 1953年의 休戰協定을 대체할 美國-北韓間의 平和條約과 같은 北韓의 議題項目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筆者의 견해로는, 南韓이 3자회담을 反對하는 것이 반드시 그 長期的인 利益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서울은 北韓의 제안을 재고하여 회의석상에서 論議될 議題項目을 提共함으로써 3자회담을 위한 역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3자회담의 제안에서 한국정부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3자회담에서의 北韓의 案件은 優先順位, (1) 美國과의 平和協定締結, (2) 韓國과의 不可侵宣言, (3) 南北韓間의 統一對話인 것임이 분명하지만, 이 議題들은 3자회담 석상에서 協商이 可能하다. 그러나 美國과 韓國이 동등한 資格으로 參席한 경우 北韓의 3자회담의 우선順位를 다음과 같이 變更할 수 있을 것이다. (1) 韓國과의 不可侵 宣言, (2) 美國과의 平和協定, 이것은 협상테이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韓國政府는 현재 北韓보다 더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으며, 膠着狀態에 빠진 南北對話를 創造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相互 受容可能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아야 할 것이다. 韓國政府는 美國과 南北韓을 포함하는 3자회담에서 討議할 議題의 項目을 準備해야 한다.

둘째, 膠着된 南北韓 關係를 타개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韓國問題를 論議하기 위한 國際會談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韓國政府는 다각적인 外交를 통해 外交的 活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가지 類型의 4者會談을 개최하여 韓國의 딜레마를 解決하도록 提案하고자 한다. 그 한 형태는 美國·中國·南北韓을 包含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특히 1953年의 休戰協定을 代替할 대안적인 調整(예컨대 平和協定)에 관해 가령 UN사무총장의 仲裁와 周旋下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中國, 北韓과 「유엔」軍(美國과 南韓)이 현존하는 休戰協定의 當事國이었다. 여기서 나카소네 일본수상이 1986년 中國訪問時에 이와 유사한 提案을 中國 指導者들에게 했었다는 점을 유의할 必要가 있겠다.

또 다른 形態의 4자회담은 美國·蘇聯, 南北韓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軍備縮小 및 經濟協力을 비롯한 기타의 關聯問題들을 논의하게 된다.²³⁾ 蘇聯이 동북아시아에서

平和를 維持하는 데 점차 중요한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는 事實을 勘案해서, 韓國政府는 2가지 類型의 4자회담을 實現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外交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세째, 北韓의 시각으로는 年例적인 合同軍事訓練(Team Spirit)은 南北對話와 協商의 성공적인 進展과는 兩立할 수 없다는 것이다. 筆者는 韓國과 美國이 韓美合同軍事訓練을 一時中斷(moratorium)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985년 이후 每年 봄에 北韓이 韓國에 보냈던 敵對인 信號를 감안할때, 팀스피리트의 一時中斷이 北韓을 南北對話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誘導하고, 또 1986년 가을에 처음 실시했던 蘇聯-北韓間의 海軍演習을 앞으로 中斷하게끔 만드는 契機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提案되고 있는 팀스피리트의 一時中斷의 問題를 앞으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代案으로서 팀스피리트 訓練의 規模나 範圍 혹은 時期를 短縮하는 問題도 考慮해 볼 수 있겠다.

네째,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過程에서 서울政府는 駐韓美軍撤收問題에 관한 長期的인 戰略的 計劃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이 問題에 관해 美國政府와 진지한 論議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美國은 韓國으로의 作戰統制權 移讓問題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問題는 이미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韓半島에서의 作戰統制權 移讓이 이루어진 以後, 서울政府는 北韓이 提案해 오고 있는 南北韓 政治·軍事會談의 개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서울과 平壤間의 問題의 열쇠는 駐韓美軍이다.

다섯째, 南韓이 현재 심각한 經濟的 沈滯를 겪고 있는 北韓에게 經濟援助 및 技術移轉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韓國의 國土統一院 資料에 따르면 1988年 末 현재 北韓의 對外負債는 約 52億\$ (이 중 28億\$는 西歐國家와 日本에게 진 負債이며 24億\$는 共產國家들에게 진 負債이다)에 달하고 있다. 西方國家 및 日本에게 빚지고 있는 28億\$ 가운데 問題가 되고 있는 약 7.5億\$는 즉시 支拂해야 할 額數가 된다. 따라서 南韓은 “經濟的 平衡”으로서 北韓을 經濟的으로 돕기 위하여 깊은 配慮를 갖는 平衡과도 같이 北韓에게 低利信用貸付나 無償援助로 南北韓 關係改善에 따라 이 빚가운데 一部를 갚아줄 것을 提案하고자 한다. 이 提案이 一部 사람들에게는 터무니 없는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長期的으로 볼 때 南北韓 關係改善과 平和定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3) 北韓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만일 北韓이 駐韓美軍撤收를 진정 원하고 있다면 對南 政治的 暴力을 拋棄함으로써 南韓에 對한 宥和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다. 北韓은 變化하는 韓半島 周邊 環境에 따라 “南朝鮮 革命”戰略을 수정해야 한다. 北韓의 南韓에 對한 “舊”政策은 最善의 利益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北韓도, 蘇聯과 中國이 이미 새로운 國際政治-經濟的 環境에서 취했던 것처럼, 實用的인 政策을 採擇함으로써 利益을 增進시킬 때이다.

둘째, 北韓은 아무런 條件없이 현재 膠着狀態에 있는 3가지 南北對話通路의 協商 테이블로 즉각 돌아와야 하겠다. 南北對話 없이는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統一過程으로 가는 可能性이 희박하게 된다. 北韓의 指導者들은 盧泰愚 大령이 北韓과 協商할 意志가 있다는 點을 분명히 理解해야 한다. 北韓은 이 좋은 機會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4) 南北韓 頂上會談을 誘導하기 위한 方案

南北韓 指導者들을 頂上會談에 나오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어떠한 措置를 취해야 하는가? 韓國政府는 韓國問題에 대해 대담하고 창조적인 接近을 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韓半島 딜레마 解決을 위해 提示되고 있는 理論的 틀(theoretical framework)은 피셔(Roger Fisher)와 우리(William Ury)의 “原則에 立脚한 協商”(Principled negotiation)에 部分的으로 立脚해 있다. 이들의 定義에 따르면 “原則에 立脚한 協商의 方法은 一方이 무엇을 할 것이다. 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시시콜콜한 흥정의 過程을 通하는 것이 아닌, 長點(merits)에 基盤을 두고 問題를 決定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方法은 언제나 相互利得을 追求하며, 利益이 相衝되는 경우에는 各方의 意志에 관계없이 某種의 公平한 基準에 입각하여 結果가 妥結되도록 고집하는 것을 시사한다. 原則에 立脚한 協商은 利益에는 엄격하지만 한 協商은 어떻게 자기의 權利를 찾으며 동시에 尊嚴性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것은 당신의 公平함(fairness)을 利用해 먹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당신 자신을 保護하는 한편 당신이 公平할 수 있게 해 준다.”²⁴⁾

소위 筆者는 여기서 “비제로섬”방안(non-zero sum formula)을 提案하여 南北韓

問의 頂上會談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비제로섬 方案이란 무엇인가? 이 方案을 南北韓이 受諾한다면 南北韓 모두가 利益을 얻어 平和定着과 南北韓改善 및 正當化를 가져올 것이고, 이 方案은 駐韓美軍의 漸進的인 撤收와 核武器의 撤去를 玆가로, 韓國이 提案한 바 있는 南北韓 不可侵協約을 포함하는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 7개항을 締結하자는 것이다. 즉, 만일 北韓이 韓國이 提案한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締結하는데 同意한다면 韓國은 駐韓美軍撤收問題를 論議하는 데 同意하겠다는 것이다. 韓國政府가 제의한 韓半島 統一이 달성될 때까지의 暫定的인 措置로서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은 다음과 같은 條項을 담고 있다.

- (1) 互惠平等의 原則
- (2) 軍事力 및 暴力의 使用禁止, 對話와 協商을 통한 問題의 平和的 解決
- (3) 雙方의 政治秩序와 社會制度의 認定 및 內部問題의 不干涉
- (4) 休戰協定의 維持와 軍備競爭 및 軍事的 對峙의 終熄
- (5) 交易, 運送, 郵便, 커뮤니케이션, 스포츠, 敎育, 文化 등의 分野에서 南北韓 交流와 協力을 통한 雙方의 社會開放
- (6) 雙方이 맺은 兩者間 多者間條約 및 協定의 尊重
- (7) 平壤과 서울에 常駐連絡代表部 設置

여기서 (4) 項은 南北韓間의 不可侵協約이 締結될 경우 協商이 可能하다. 뉴스 미디어에 따르면 1985년 가을 南北韓 兩側의 特使가 平壤과 서울을 서로 오고 갔다고 하는데,²⁵⁾ 같은 方式으로 韓國政府는 이 方案에 따라 北韓當局에 비밀리에 接近해야 하겠다.²⁶⁾ 그런 다음에 基本關係에 관한 協定 및 駐韓美軍撤收問題를 동시에 논의하기 위하여 頂上會談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筆者의 이 方案을 美軍撤收問題, 平和條約, 不可侵宣言에 관한 南北韓이 지금까지 提議해 온 내용들에 기초를 둔 하나의 妥協案이다. 南北韓이 不可侵協定을 포함하는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을 체결하게 될 때 韓半島에서의 美軍의 存在를 正當화시킬 根據가 희박하게 된다.

南北韓이 이 方案을 수락할 것인가? 筆者의 견해로는 이 方案은 膠着狀態에 처한 南北韓 政治的 對話를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平和定着過程이며 서울과 平壤 모두에게 수락 可能的한 것이다. 이 方案을 제안하는 筆者는 다음과 세가지

關聯된 問題를 신중하게 고려하였다. (1) 韓半島의 平和와 安保, (2) 美軍撤收와 南北韓間의 軍事的 均衡, (3) 韓半島 統一 등이다. 이 세가지 問題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세가지 問題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는 南北韓 雙方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韓半島 딜레마 解決을 위한 어떠한 方案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方案을 제의하는 理論的 根據(rationale)는 무엇인가? 우선, 駐韓 美地上軍은 南北韓의 軍事的·戰略的 均衡에서 하나의 均衡者(balancer)의 役割을 수행해 왔다. 그래서 韓半島에는 駐韓美軍의 存在가 北韓에 대한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戰爭抑止力(deterrence)을 행사해 왔다. 南北韓 사이에 軍事的 不均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軍이 撤收한다면 北韓은 南韓에 대해 軍事的 行動을 취할 유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間에 軍事的 均衡이 이루어진 결과로 北韓이 南韓에 대하여 軍事力을 사용하려고 試圖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일단 南北韓間에 軍事的 均衡이 이루어진 뒤에는 駐韓美軍撤收問題가 최소한 平壤을 서울과의 協商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흥정의 카드나 도구(bargaining chip)로 利用될 수 있다. 北韓은 韓半島로부터 美軍을 제거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 方案은 金日成을 頂上會談에 나오게 誘引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앞에서 論議한 方案과 연관해서 다음의 要素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겠다. 韓國의 安保는 美軍撤收에 의해 危險에 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北韓으로 부터의 양보없는 駐韓美軍의 撤收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危險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따라서 美國과 韓國은 北韓, 中國, 蘇聯으로부터 讓步, 즉 (1) 4강에 南北韓 交叉接觸 및 交叉承認, (2) 두 개의 코리아의 유엔加入, (3) 서울, 平壤間의 不可侵協定 締結, (4) 前述한 바와 같이 2가지 類型的 4자회담 등의 讓步를 얻어내야 한다. 美國이 이 方案을 받아들일까? 이 方案의 實現을 위한 첫 단계는 駐韓美軍의 撤收에 대한 韓·美間의 利害를 一致시키는 것이다. 韓國은 앞에서 논의된 方案과 관련하여 軍事作戰權 移讓과 駐韓美軍 撤收에 관한 問題를 논의하기 위해 이니셔시어티브(initiative)를 잡아야 한다. 韓國이 軍事作戰權을 統制해야 할 것이다. 韓國政府는 駐韓美軍이 韓國에 영원히 駐屯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언젠가는 駐韓美軍은 떠날 것이다. 駐韓 美地上軍의 減縮 및 일부 최근 美國議會의 決議案에 의하면 撤收를 主張하고 있다. 美國務省의 한 官吏는 만일 韓國政府가 要請할 경우 駐韓美軍이 곧 撤收할 수 있을 것이라고 公式的으로 발언하였

다. 따라서 韓國內의 점증하는 民族主義와 反美運動 및 변화하고 있는 美國內의 政治的 狀況을 감안할 때 駐韓美軍은 가까운 장래에 撤收할 것이다. 2개의 코리아간 에 현재 근본적인 戰略的 均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韓國政府는 北韓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政治的 지렛대(leverage)로서 駐韓美軍撤收問題를 사용해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美國이 韓國으로부터 美軍을 撤收시키겠다는 決定을 내리기 전에 韓國政府는 北韓과의 協商을 위한 政治的 協商의 카드로서 駐韓美軍撤收問題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韓國의 學者들 중에는 南韓內의 美軍의 存在는, 北韓의 侵略에 대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戰爭抑止力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또한 駐韓美軍撤收問題는 1953년의 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른 韓國과 美國의 雙務的인 問題이며 따라서 韓·美 兩國에 의해 협상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筆者도 이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서 提案하고 있는 것은 駐韓美軍撤收問題가 北韓을 다루는데 흥정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北韓이 이 方案을 수락할 것인가? 平壤이 이 方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拒絕한다면 그것은 平壤이 서울과 진지하게 協商할 準備가 되어있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또한 北韓이 '南朝鮮革命戰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北韓이 서울·平壤間의 基本關係條約을 締結하는데 동의할 때까지 駐韓美軍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VI. 民族共同體 實現을 위한 4強의 國際協力

(3段階:4強은 무엇을 해야 하나?)

第3段階는 前段階에서 南北韓間의 平和共存體制가 制度化된 이후에 혹은 동시에 주변 4強(美, 蘇, 中, 日)이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定을 보장하는 단계로서, 第2段階가 南北韓間의 調整과 和解의 문제라고 하면 第3段階는 國際的인 環境과 연관된다.

第3段階는 서로에 대한 相互 認識이 보다 구체적인 協力과 友好關係로 크게 발전한 이후에야 가능하게 된다. 최소한 南北韓間의 相互信賴가 南北韓이 서로에 대한 악마의 “거울 이미지”(mirror-image)가 輕減될 수 있는 정도에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絶對的으로 必要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段階에서 統一韓國에 대한 社會·經濟·政治 體制에 관한 合意가 있어야 할 것이다. 統一中央政府體制를 위한 相互 受容 可能한 靑寫眞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均衡的인 4強體制에서는 南北韓은 지금까지의 그 強大國 同盟國과의 “癒着”을 약화하고 強大國의 軍事的 보호에 依存度を 줄여야 한다. 이 段階에서 4強의 役割이 동북아시아에서의 安定과 安保에 필수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韓半島에 관한 國際平和 安保 및 經濟協力會議가 개최될 것을 제안한다. 이 會議의 參加國은 美國, 日本, 中國, 蘇聯을 포함하게 된다. 美國 혹은 南北韓의 立場이 이러한 國際會議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會議의 일차적인 목적을 4強間의 理解에 到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4強은 南北韓을 모두 인정하며, (1) 南北韓間의 전쟁포기에 관한 暫定協定, (2) 南北協商에 불간섭, (3) 南北韓間의 개발과 협력을 保障하게 된다. 예컨대, 南北韓間의 開發과 協力は 20개 示範事業에서 韓國 政府가 제안했듯이 서울—평양간의 고속도로 開通과 天然資源의 共同開發과 利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第3段階에서는 아직도 強大國들이 “南北韓間의 政治協商”에 간섭할 충분한 소지가 남아 있을 것이다. 南北韓 指導者들에 대한 外部壓力의 極小化가 차후의 段階를 위한 “자유로운” 霧圍氣를 圖謀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南北韓은 각각 4強과 同盟을 맺지 않을 것이며, 양측은 모두 統一韓國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이상의

조치들을 스스로 취할 것이다. 이 段階에서 1953년 韓美相互防衛條約과 1961년 中-蘇 同盟條約, 1961년의 中-中 同盟條約이 廢棄되어야 할 것이다.

第3段階에선 民族共同體 實現을 위하여 4強이 취하여야 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4強(美·日·中·蘇)이 南北韓 關係改善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諸方案

1) 美國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美國은 韓國政府의 요청이 있을 경우 南北韓 關係改善을 위하여 韓國에게 作戰統制權의 移讓을 비롯하여 駐韓美軍의 減縮 혹은 段階的 撤收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協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美國은 앞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것과 같은 2개 형태의 4者會談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겠다. 美·蘇·南北韓이 참가하는 한 類型的 4자 회담에서는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 및 軍備縮小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과, 동북아시아에서의 經濟協力の 問題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형태의 4者會談에서는 軍縮問題가 다뤄지기 때문에 자연히 韓半島의 非核化나 韓半島로부터의 核武器 撤去 등이 다루어질 것인데, 美國은 범세계적 戰略的 고려의 側面에서 현재로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美·蘇間의 新데탕트가 지속된다고 할 경우, 美國은 INF(중거리핵무기) 廢棄協定에 蘇聯과 合意했듯이, 韓半島에서의 核武器撤去에 同意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美國은 또한 韓國의 7·7宣言의 취지에 따라 北韓과의 接觸과 交流를 확대함으로써 北韓의 國際的 孤立狀態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美國은 韓國의 經濟成長과 對美 貿易黑字를 문제삼아 兩國간의 심각한 貿易摩擦을 야기시키는 대신, 韓·美 相互利益의 바탕위에서 善隣關係를 유지해야 하겠다.

2) 蘇聯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蘇聯은 美·蘇·南北韓이 참가하는 4者會談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美·蘇·南北韓이 참석하는 4者會談에서 蘇聯이 얻게 될 利益이 損失보다 많으며 또한 南北韓間의 緊張緩和를 원하며 韓半島에서의 전쟁재발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그들의 外交政策 基本目標을 놓고 볼 때, 蘇聯은 4자회담을 贊成할 것으로 보여진다. 筆者가 1988년7월 모스크바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소련정부 관리가 개인적으로 필자가 제안한 4者會談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으며, 다른 蘇聯學者들(蘇聯科學院)도 韓半島 緊張緩和를 위해 생산적인 이 提案을 지지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蘇聯은 美·蘇·南北韓間의 會談에서 軍縮問題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北韓에게 高性能 最新武器의 提供을 中斷할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겠다. 蘇聯이 계속해서 北韓에게 MIG-29, Su-25 혹은 SA-5같은 最新銳 武器를 供給할 경우 현존하는 韓半島에서의 勢力均衡이 파괴될 수 있으며 또한 南北韓間의 軍備競争을 유발할 소지가 많은 것이다.

1984년 이후 北韓에게 軍事的·經濟的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蘇聯은 北韓과의 긴밀한 軍事的 紐帶關係를 맺고 있다. 蘇聯은 긴밀한 紐帶關係를 통해 얻어진 對北韓 影響力을 이용하여,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定을 위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南北對話 및 協商을 再開하도록 권유 혹은 압력을 가할 수 있겠다. 蘇聯의 戰略目標은 韓半島에서의 南北韓間의 勢力均衡을 유지하여 韓半島에서의 戰爭의 再發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은 北韓으로 하여금 南韓과의 對話와 協商에 임하도록 誘導하는 것이 自國의 이익에도 합치된다.

현재까지 蘇聯은 韓國과 非政治的이며 비공식적인 接觸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韓·蘇間의 接觸이 보다 활발해져 貿易事務所를 개설하였다. 특히 蘇聯은 시베리아개발과 관련하여 韓國과의 經濟的 交流를 확대시키고 기타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接觸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은 蘇聯은 韓國과의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接觸과 交流를 擴大·發展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政治的 關係 正常化의 길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蘇聯은 北韓이 반대하는 한 韓國과의 關係正常化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므로, 韓·蘇 關係正常化 이전에 南北韓 關係改善

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中國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中國은 美·中·南北韓이 참가하는 4者會談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무엇보다도 現存하는 休戰協定을 平和條約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中國은 北韓·유엔군과 더불어 休戰協定 當事國으로서 4者會談을 통해 韓半島問題에 대해 政治的 解決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中國은 韓國과의 人的·經濟的·文化的 分野에서의 非政治的 交流를 擴大시킴으로써 兩國의 國家利益을 추구하며,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兩國間의 接觸과 交流가 결국은 政治的 關係正常化의 段階로까지 擴散(spillover)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蘇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韓·中間의 正常化는 南北韓 關係가 향상되기 전에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4) 日本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日本이 南北韓 關係改善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政策은 政治的 브로커(broker)로서 南北韓 關係改善을 위해 善隣外交를 펴는 것이다. 우선 日本은 2가지 形態의 4者會談에 대한 仲裁者의 役割을 수행할 수 있다. 1986년 11월 나카소네 일본수상이 北京을 訪問하였을 때 美·中·南北韓을 포함하는 4者會談을 제안함으로써 韓半島問題解決을 위한 仲裁에 나선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또한 日本政府는 韓國政府의 7·7宣言에 부응하여 北韓과의 接觸과 交流를 확대함으로써 北韓을 孤立狀態에서 國際的 무대로 나오도록 誘導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日本은 北韓과의 接觸과 交流를 實施하면서도 南韓과의 均衡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日本을 南北韓間의 커뮤니케이션 通路를 제공할 수 있다. 日本內에는 親北韓系 朝總聯과 親南韓系 居留民團組織이 共存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 組織을 利用하여 南北韓間의 커뮤니케이션 通路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예컨대 日本은

「니가타」는 地理的으로 有利하게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南韓・北韓 및 蘇聯거주의 韓族 離散家族이 再會할 수 있는 會合의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VII. 結論：政策 勸告

본 논문에서 필자는 民族共同體에 입각한 韓半島 統一政策의 단계적 政策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韓民族共同體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5단계 “블록 건조식” 統一方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 건조식 統一方案의 제1단계는 南北韓이 非政治的인 분야에서 相互 接觸과 對話를 지속함으로써 南北韓간의 信賴構築의 基礎을 쌓는 단계이다. 이미 南北韓은 1971년 이후 對話와 接觸을 유지함으로써 제1 단계를 거쳤다.

現在는 南北韓이 제2단계에 들어선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南北韓은 政治·軍事的 영역에서 對話를 통하여, 南北韓 基本關係 條約을 체결함으로써 韓半島에 平和 共存體制를 制度化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제2단계를 위하여 南北韓이 함께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兩側이 板門店에 고도의 通信施設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을 가칭 “韓民族共同體研究院”으로 칭하고 平和的 統一과 韓民族葛藤·紛爭調停을 위한 共同 研究機關으로 삼는다.

둘째, 南北韓이 “7·4共同聲明”의 內容과 精神을 준수한다. 셋째, 韓國은 駐韓美軍 撤收問題에 柔軟性을 보이며, 北韓은 “南朝鮮 革命戰略”을 포기함으로써 각기의 基本政策을 수정해야 한다. 넷째, 北韓은 交叉承認方案을 受容하여야 한다.

또한 제2단계에서 韓國과 北韓이 각각 취해야 할 政策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韓國政府는 北韓이 1984년 1월 10일에 제안한 3者會談을 肯定的으로 檢討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韓國은 2개 形態의 4者會談을 開催함으로써 韓國問題 해결을 摸索하여야 한다. 美國, 中國, 南北韓을 포함하는 形態의 4자 회담에서는 現存하는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美國, 蘇聯, 南北韓을 포함하는 또 다른 形態의 4者 會談에서는 軍備縮小 및 經濟協力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셋째, 韓國은 연례 韓美 軍事訓練인 팀 스피리트 訓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그 規模를 축소함으로써 韓半島에서의 南北韓간 대담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겠다. 넷째, 韓國政府는 駐韓美軍撤收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단계적인 駐韓美地上軍 撤收를 北韓과의 協商에서 協商 道具로 삼는 것을 고려한다.

다섯째, 韓國이 北韓에게 經濟的 援助를 제공한다거나, 技術移轉을 施行함으로써 長期的으로 南北韓 關係改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北韓으로서는 첫째, “南朝鮮 革命戰略”이 무용함을 깨닫고 이 戰略을 포기하며, 둘째, 韓國에서의 國內的 政治狀況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協商테이블로 즉각 들어와서 진지하게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해 임하여야 할 것이다.

제2단계에서 韓半島의 平和共存體制를 制度化하기 위하여 필자는 이른바 제로섬 방안 (non-zero sum formula)을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韓國으로부터 核武器撤收와 駐韓美地上軍의 段階的 撤收를 조건으로 北韓과의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체결하는 것이다.

제2단계에서 南北韓간의 基本關係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過程에서 남북한은 제3단계 진입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는 주변 4強이 韓半島에서의 平和共存體制를 확인하고 보장하게 된다. 제2단계와 제3단계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4強(미국, 일본, 중국, 소련)이 韓半島에 관한 國際平和, 安保 및 經濟 協力會議을 개최하여 4강이 韓半島에 관한 理解에 到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제3단계에서는 南北韓이 강대국들의 韓半島 문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여야 하며, 남북한이 強大國들과 맺고 있는 同盟關係를 폐기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4強의 國際協力 段階에서 4強이 취해야 할 政策들을 본다면, 美國은 韓國政府의 요청이 있을 경우 駐韓美軍의 段階的 撤收와 軍作戰統制權 移讓問題에 협조를 해야 하며, 美, 蘇, 南北韓을 포함하는 4者會談에서 韓半島에서의 軍縮問題와 동북아시아에서의 經濟協力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北韓과의 接觸과 交流를 증대함으로써 北韓이 國際舞臺에 나오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蘇聯은 美, 蘇, 南北韓의 4者會談에서 韓半島에서의 軍縮問題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며, 북한에게 最新武器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南北韓間的 軍備競爭이 加速化되는 것을 방지하며, 한국과의 多角的인 接觸과 交流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韓國과의 關係 正常化의 길을 摸索해야 하겠다. 中國은 美, 中, 南北韓이 참가하는 4者會談에서 現存하는 休戰協定을 平和條約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韓國과의 接觸 및 交流를 증대시킴으로써 韓國과의 關

係正常化를 도모해야 하겠다.

日本은 2개 형태의 4者會談이 성사될 수 있도록 仲裁者의 役割을 할 수 있으며, 또한 日本내의 朝總聯系 組織과 居留民團 組織을 통한 남북한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제3단계가 지나고 제4단계에 도달하면 사실상 統一의 基本的인 골격을 갖추게 된다. 제4단계는 南北韓의 核心的 利益이 裁定되는 단계로서 남북한 모두가 하나의 韓民族의 利益을 설정하게 된다. 이 단계는 “韓民族共同體”형성의 시기와 일치하며, 南北韓간의 體制聯合이 실현되게 된다. 이 때 政策을 形成하여 南北韓 모두에게 집행할 수 있는 諸機構가 構成된다.

제5단계는 南北韓 統合의 최종 단계로서 “南北韓 政治的 統合會議”가 개최되어 南北韓 指導者들이 統一韓國의 政治體制에 관하여 會議을 보게되는 단계이다. 이 통일국가를 가칭 “高麗(朝鮮)聯邦共和國”으로 칭할 수 있겠다.

이러한 5단계 統一方案은 政府가 현재 구상중에 있는 “韓民族共同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具體的인 政策을 제시하는 것이다. 筆者의 5단계 블록 건조식 統一方案을 순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民族共同體 實現을 이룰수 있으리라고 본다.

韓半島의 政治的 統合體制는 요원한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幻想도 아니고 그렇다고 1990년대의 가까운 將來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한 것도 아니다. 南北韓은 이 모델에서 韓半島 統一의 제2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이 모델을 有用하고 實行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 한반도에서의 緊張緩和, (2) 統一을 위하여 필수적인 南北韓間 및 國際的 條件을 조성하고, (3) 제안된 이 모델의 틀속에서 궁극적인 政治的 統合을 達成하기 위하여 10가지 命題를 제시한다.

1.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定이 韓半島 統一을 위하여 필요하다.

韓國問題의 해결이 國際的 安定과 平和에 기여할 것이다.

2. 4強間의 데탕트와 南北韓 間的 데탕트가 韓半島와 平和, 安定, 統一을 위한 先行要件이 된다.
3. 4強의 理解, 協力과 데탕트와 脈絡속에서 韓半島의 統一은 外세의 간섭없이 韓國人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統一韓國은 4強의 그 어느 國家와도

同盟關係를 갖지 말아야 한다.

4. 지속적인 中-蘇 데탕트가 韓國問題 해결에 도움이 된다. 中-蘇간에 韓國問題에 관하여 利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中國과 蘇聯은 南北韓간의 政治的葛藤의 해소를 장기적인 眼目에서 追求하기 위하여 韓半島에서의 權力政治의 介入을 중단하여야 한다.
5. 南北韓에 대한 무기제공 중지와 韓半島의 非核化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는 軍備統制가 韓國問題 해결에 필수적이다. 또한 南北韓간의 데탕트가 韓半島에서의 軍비통제에 先決條件이다. 이러한 先決條件들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南北韓은 각자의 現정책을 修正하여야 한다. 韓國은 駐韓美軍撤收 문제에 대하여 柔軟性を 보여야 하며, 北韓은 對南 革命戰略을 포기하여야 한다.
6. 南北韓은 비록 그것이 적대적인 相互作用을 감소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相對方의 誠意와 行動을 不信하는 경향이 있다. 相互不信이 크면 클수록, 그 만큼 양측이 서로 협력하지 않을 蓋然性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양측은 相對方에 대한 악마의 거울 이미지를 제거함으로써 相互信賴를 쌓고 南北韓 데탕트를 圖謀해야 하겠다.
7. 相互信賴와 友好的인 關係를 증진하기 위하여 南北韓은 紛爭的인 행동패턴을 줄임으로써 協力的인 相互作用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8. 양측이 核心的 政策決定者들은 유사한 目的과 選好를 共有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측의 政策決定者들은 目的과 選好에 대한 합일성을 이루고 韓半島 統一에 대한 接近方法에 合意하여야 한다.
9. 양측은 統一된 行政的, 經濟的, 政治的 체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統一韓國을 위한 이같은 靑寫眞의 開發과 計劃은 核心的으로 중요한 임무이지만 南北韓間의 데탕트를 위한 前提條件은 아니다.
10. 北韓은 南朝鮮 革命이 軍事的手段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韓半島의 통일이 협상과 哄정을 통한 政治的, 平和的 수단을 통해서만 達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韓國의 指導者들도 北韓에 대한 認識을 변화하여야 한다. 즉, 北韓이 軍事的手段을 통하여 남한을 赤化하려는 目的을 끈질기게 고집하고 있다는 인식을 변화해야 한다. 양측은 統一 國家建設을 위한 政治的인 장치가

합의하에 마련될 때까지는 본 條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南北韓은 서로간에 妥協하고, 南北韓간 차가운 關係를 녹이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양측의 최고 政策決定者들간의 相互妥協과 讓步가 없이는 韓民族을 위한 統一國家는 존재할 수 없다. 南北韓 協력이 分斷韓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유리한 前提條件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韓半島의 政治的 統合이 동북아시아 하위 체계에서의 4強간의 國際的 데탕트는 물론 南北韓간의 紛爭解消와 持續的인 協力的 行動의 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일성은 1985년 6월 1일 日本의 월간지 『世界』의 편집자와 對談에 “北韓은 남 조선을 侵略할 의사도 없으며 그럴 能力도 없다”²⁷⁾고 말하였다. 과연 金日成은 南 侵할 의사와 能力이 없는 것일까? 필자의 판단으론 北韓은 南 侵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北韓은 현재 經濟的으로 不安定하고 부진한 상태에서 南 侵하여 戰爭에서 이길 軍事·經濟的 能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1945년 韓半島가 南北으로 분단된 이래 거의 45년 동안 金日成은 駐韓美軍 撤收를 한결같 주장하여 왔다. 1949년 6월까지 駐韓美軍이 韓半島로부터 撤收하자 1950년 6월 25일 韓半島를 武力으로 統一하기 위하여 南 侵했던 歷史的 事實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韓國戰爭이 터지자 다시 美軍이 즉각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韓國의 安保는 確保되었으며 결국 美國의 韓國戰 介入으로 말미암아 金日成의 統一國家의 꿈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駐韓美軍은 金日成이 北韓 內部에 金日成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김일성은 駐韓美軍의 存在를 이용하여 그의 體制構築과 유지를 하였으며, 北韓을 兵營國家로 만들수 있었다. 金日成은 “美帝國主義”의 威脅을 구실로 하여 北韓에 全體主義的 社會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韓國政府가 駐韓美軍 撤收에 동의한다고 할 경우 金日成체제가 오늘날과 같이 공공연히 유지되고 그 正統性을 確保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金日成은 駐韓美軍 撤收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일까?

駐韓美軍이 韓半島에서 물러간다고 할 경우 金日成체제가 아무런 도전을 받음이 없

이 유지될 수 있을까? 駐韓美軍의 存在가 金日成 1인 獨裁體制를 공고히하고 북한에서의 安定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가정할 때, 金日成의 자신의 正統性的 基盤을 형성해 준 “南半部에서의 美帝國主義의 威脅”이 제거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駐韓美軍의 撤收가 곧 金日成體制的 威脅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第6共和國 政府는 본 論文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駐韓美軍撤收問題를 보다 積極的이며 과감하게 주도권을 잡고 段階的인 側面에서 政策을 채택함으로써 北韓을 對話의 窓口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南朝鮮 革命” 基本戰略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戰術的인 變化는 결국에 가서는 戰略的인 變化를 유도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제6공화국의 北方政策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北方政策”이 장기적인 眼目에서 追求될 때 金日成이 “南朝鮮 革命”의 基本戰略에 變化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韓半島에서의 平和共存의 制度化가 이루어지고 統一을 향한 平和定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필자가 다른 論文속에서 논의한 것처럼, 南北韓은 韓半島에서 戰略的 均衡(Strategic equivalence)을 이루고 있다.²⁸⁾ 戰略的 均衡의 조건 하에서, 북한의 제1차 타격력이 北韓에게 유리하게 作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北韓이 韓國에 대하여 먼저 공격할 것같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北韓이 戰爭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軍事戰略家들이 南韓에 대한 선제공격을 제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變化하고 있는 國內外的 環境에 비추어 한국이 駐韓美軍의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으며, 北韓에 대한 새로운 安保政策을 追求하는 것이 시급히 要求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駐韓美軍의 永久的인 存在를 원하는 “現狀維持”(status quo)政策이나, 駐韓美軍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撤收를 要求하는 “現狀打破”(anti-status quo)政策은 모두가 韓半島 統一로 향하는 平和定着過程을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 대안으로서 韓國政府가 “實用主義政策”(policy of pragmatism)을 채택하여 韓半島에서의 南北韓 關係改善과 緊張緩和를 위하여 駐韓美軍撤收問題를 北韓政府와의 協商에서 哄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이미 제안하였다. 제6공화국정부는 남북한

關係改善과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過程을 최고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駐韓美軍 撤收 問題에 대하여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韓國政府가 駐韓美軍撤收 問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필자는 “비-제로섬”(non-zero sum)방안을 되풀이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방안이야말로 南北韓 頂上會談과 韓半島 統一을 위한 平和의 열쇠라고 확고히 믿고 있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은 韓半島에서의 핵무기의 完全撤收와 함께 駐韓美軍의 減縮과 점진적인 撤收를 조건으로 한국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 제안되었던 南北韓不可侵協定을 포함한 서울-平壤간의 基本關係條約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方案은 南北간의 戰略的 균형이 駐韓美地上軍이 없이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에서의 힘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駐韓美地上軍의 撤收는 점진적으로 段階的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美地上軍이 철수한 후에도 美空軍이 계속 얼마간 남아서 韓半島에서의 戰略的 안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美國의 早期警報體制가 韓國이 獨自의인 早期警報體制를 갖출 때까지 더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한다.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政策提案을 하고자 한다. 韓半島 統一로 향한 平和는 南北韓 모두의 최고의 目標가 되어야 한다. 이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들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 南北對話가 生産的이기 위하여는 팀 스피리트 '90을 중단하여야 한다.
2. 韓國과 美國이 北韓이 제안한 美國, 南北韓을 포함하는 3者會談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盧-金 頂上會談에서 南北韓이 美軍撤收의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韓國과 美國이 다음과 같은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 駐韓美軍의 段階的 撤收를 위한 戰略的 계획안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1) 한국내의 핵武器的 除去, (2) 美國과 北韓간의 平和條約과 南北韓間의 不可侵宣言을 條件으로 한 美地上軍의 撤收, (3) 韓半島의 平和體制가 확고히뿌리 박은 다음, (4) 駐韓美空軍의 撤收 등이 순서로 실행한다.

5. 관련 4大強國(美國, 中國, 蘇聯, 日本)이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統一過程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共同平和宣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2가지 形態의 4者會談(美國, 中國, 南北韓/美國, 蘇聯, 南北韓), 5者會談(美國, 蘇聯, 中國, 南北韓), 노대통령이 제시한 것과 같은 長期的으로는 6者會談을 포함하는 多者間 會談의 필요성이 있다.

美國이 韓國政府에게 作戰統制權을 移讓한 이후 韓國이 南北韓 政治-軍事會談을 개시하여야 한다. 韓國이 美國에 대한 安保依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로 된다. 제 6공화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平和定着過程에서 동등한 동반자로서 美國과의 새로운 安保관계를 追求하는 것이다. 韓國政府가 韓半島의 딜레마를 다루기 위하여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南北韓이 相互信賴, 互惠, 그리고 相互讓步의 기반위에서 韓半島 統一을 指向하는 平和를 구축하기 위하여 段階的으로 함께 노력할 때 韓半島 問題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확고한 信念이다.

【註】

1. 『南北對話白書』(남북조절위원회, 1975), pp.3-10.
2. Ibid., pp.81-90; The Pyongyang Times (July 9, 1972).
3. 『7·4 南北共同聲明』, 全文은 『南北對話白書』(國土統一院, 1985), pp.82-83 참조.
4. Korea Herald (January 13, 1980).
5. Kim Il Sung, Report to the Six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on the Work of the Central Committee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0), pp.59-81.
金日成의 보고에 관한 한글판은 1980년 삼학사에서 간행되었다.
6. 全斗煥大統領의 제안全文은 『南北對話白書』(1985) 참조.
7. 全大統領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DPRK Permanent Observer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Press Release, Vol. 5 (January 26, 1982)를 참조.
8. DPRK Permanent Observer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Press Release,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Issues Statement Calling for Convocation of Joint Conference of Politicians in North and South and Abroad on February 10, 1982."
9. 金英鎭교수 역시 이 점에서 한국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Young C. Kim, "North Korean Foreign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January-February, 1985), pp.1-17 참조.
10. 이 부분에 대해서는 Joongang Central Daily News와 Korea Herald, New York Times의 1985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기사내용에 의존했다.
11. Korea Herald (July 8, 1988).
12. Korea and World Affairs, Vol. XII, No. 4(Winter 1988), p.842.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pp. 870-876 참조.
14. 남북한 당국 비밀 접촉은 1989년 8월 5일자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를 참조.
15.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Tae-Hwan Kwak, In Search of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Korea : Seoul Computer Press, 1986) 참조.
16. Kim Il Sung, Report to the Six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on the Work of the Central Committee (Pyongyang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0), pp. 59-81.
17. 金斗煥大統領이 제안한 통일방안의 전문에 관해서는 Korean Newsletter, Vol. 5, No. 1 (March 1982), pp. 2-3을 참조.
18. Korean Newsletter, op. cit.
19. 과정과 조건으로서의 통합에 관한 다양한 정의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
Ern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58), p. 16; Ernst B. Haas, Beyond the Nation-State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64), p. 29; Amitai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p. 4; Leon N. Lindberg, The Political Dynamic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p. 6;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Univ. Press, 1957), pp. 5-6; Phillip E. Jacob and Henry Teune, "The Integration of Process : Guidelines for Analysis of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in Jacob and Toscano, eds.,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Co., 1964), p. 4;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4 (1968), p. 377; Johan Galtung, "Divided Nations As A Process -- One State, Two states, and In-Between : The Korean Cas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9, No. 4 (1972), pp. 345-360.

20. 필자의 본래의 제안에 관하여는 Tae-Hwan Kwak, "A 'Block-Building' Approach to Korean Reunification," Report of the First Joint Conference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d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tists in North America (Seoul, Korea :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75); Se Jin Kim, Reprinted in Problems of Korean Unification (Seoul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and see Tae-Hwan Kwak, "A 'Block-Building Model of Korean Political Integration : Revisited," in Tae-Hwan Kwak, Chonghan Kim, and Hong Nack Kim, eds., Korean Reunification :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Seoul, Korea : Kyungnam University Press &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1984), pp. 295-305 참조.
21.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은 미제국주의 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한다는 조건하에서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병력을 대폭적으로 감축할 것을 주장합니다." Kim Il Sung, For the Independent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Pyongyang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5), p. 187.
22. 핵심이익 (core interest)이란 정책결정자가 민족-국가의 존립에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이익이 위협을 받는다고 할 경우 그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는다고 결정한 이익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핵심이익에 대한 위협은 민족-국가로 하여금 마치 그 생존에 위협을 당하는 것같이 반응하게 한다. 이러한 핵심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민족-국가는 전쟁도 불사하게 된다. 여기서 정의된 바의 핵심이익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여러 학술적인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K.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 A Framework for Analysis, 3rd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7), pp. 145-148; Tae-Hwan Kwak, "The Use of the Concept of Core Interest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alysis," in Proceedings of the 4th Joint Conference of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tists in North America (Seoul, Korea :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81), pp. 23-31.

23. 美·蘇 南北韓이 참가하는 4자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에 관해서는 곽태환, "한반도의 평화정착구상 : 4자회담 (미국, 소련과 남북한)의 제안과 대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8년 봄), pp. 207-232 참조.
24. Roger Fisher & William Ury, Getting to Yes :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Boston : Houghton Mifflin, 1981), p. xii.
25. 1985년 9월 17일자 『요미우리』新聞은 북한 金日成의 특사 허담이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두환대통령 및 국가안전기획부장 장세동과 1985년 9월 4일에서 6일에 걸쳐 대담했다고 보도했다.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역시 1985년 9월末 김일성과의 담화를 위한 장세동의 평양행에 관해 보도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이러한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서울과 평양간에 비밀리의 방문이 오고 갔으며 남한과 북한이 김일성-전두환 정상회담을 위한 주선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26. 『內外通信』, 444호 (1985년 7월 19일).
27.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Tae-Hwan Kwak, "Peace Process and Military Capa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Annual Convention of the British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London, England, March 28-April 1, 1989 참조.

民族共同體 實現을 위한
段階的 政策 摸索

1989년 10월 일 인쇄
1989년 10월 일 발행

발행처: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1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5호
☎ 720-2141, 2425

간행책임: 사 순 문
인쇄소: 문성경인(주)

서기 1989년 10월 4일 50부 발간	
발간업체 : 문 성 경 인 (주) 738-7434 738-0619	
대표자 : 김 재 희	
인가근거 : 조내자 2066-14387 호 (64.12.18)	
참여자	국토통일원 제 1 연구관실
	5급 사 순 문

